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0. 5.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1. 감사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	1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	4
4. 감사반의 편성 .....	5
가. 방침 .....	5
나. 감사반 .....	5
5. 감사 일정 .....	6
6.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9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나. 방송통신위원회 .....	48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70
라. 소속기관 .....	81
1) 우정사업본부 .....	81
2) 국립중앙과학관 .....	83
마.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84
1) 한국연구재단 .....	84

2)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	86
3) 한국과학창의재단 .....	86
4) 한국과학기술원 .....	86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	88
6)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	88
7)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	89
8) 광주과학기술원 .....	89
9) 울산과학기술원 .....	89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90
11) 기초과학연구원 .....	91
12)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	92
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92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92
15) 한국원자력의학원 .....	93
16) 국립광주과학관 .....	93
17) 국립부산과학관 .....	93
18) 한국나노기술원 .....	94
19)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94
20)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94
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94
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00
2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	100
2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01
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01
2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01
27) 한국원자력연구원 .....	102

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03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04
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104
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05
32) 한국식품연구원 .....	105
33)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	106
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06
35) 한국기계연구원 .....	106
36)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	106
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07
38) 한국화학연구원 .....	107
3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07
40) 한국인터넷진흥원 .....	109
4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14
42) 한국정보화진흥원 .....	115
4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118
4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19
45) 시청자미디어재단 .....	122
4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122
4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123
4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123
49) 한국수력원자력(주) .....	124

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128
1) 과학기술인공제회 .....	128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128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28
4) 한국방송공사 .....	131
5) 한국교육방송공사 .....	138
6) 방송문화진흥회 .....	140
7.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4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14건) .....	146
나. 방송통신위원회(68건) .....	166
다. 원자력안전위원회(78건) .....	171
라. 소속기관 .....	177
마.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178
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199
8. 기타사항 .....	205
가. 일반증인·참고인 출석현황 .....	205
나.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요지 .....	209
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	223

## 1. 감사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입법, 예산·정책심사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2. 감사기간

2019년 10월 2일 (수) ~ 2019년 10월 21일 (월)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 위원회 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호 해당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련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p>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sup>1)</sup>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	

구 분	기 관 명	비 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 위원회 관련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 위원회 관련기관
소 계	73개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련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 위원회 관련기관
소 계	9개	

1)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포함.

## 4. 감사반의 편성

### 가. 방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20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 나. 감사반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더불어민주당	노 응 래	위 원 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 성 수	간 사
		박 광 재	
		변 유 은	
		이 개 혜	
		이 상 호	
		이 원 욱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 성 태	간 사
		박 대 출	
		박 성 중	
		송 희 경	
		윤 상 직	
		정 용 기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신 용 현	간 사
		박 선 속	
민 중 당	민 중 당	김 중 훈	
무 소 속	무 소 속	김 경 진	

## 5. 감사 일정

### <감사실시 계획>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2. (수) 10:0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우정사업본부 3. 국립전파연구원 4. 중앙전파관리소 5. 국립중앙과학관 6. 국립과천과학관 7. 우체국물류지원단 8. 우체국금융개발원 9.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 우체국시설관리단	국 회	
10. 3. (목)	개 천 절		
10. 4. (금) 10:00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사무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시청자미디어재단	국 회	
10. 7. (월)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 한국수력원자력(주)	국 회	
10. 8. (화)	현장시찰		
10. 9. (수)	한 글 날		
10. 10. (목) 10:00	1. 한국연구재단 2.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6.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융합기술원 7.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8. 광주과학기술원	국 회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 울산과학기술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12. 기초과학연구원 13.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1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과학기술인력개발원 17. 한국원자력의학원 18. 국립대구과학관 19. 국립광주과학관 20. 국립부산과학관 21. 한국나노기술원 2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5. 과학기술인공제회 2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0. 11. (금) 10:00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6. 한국천문연구원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 한국한의학연구원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 한국원자력연구원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회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 한국식품연구원 19.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2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 한국기계연구원 22.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 한국전기연구원 25. 한국화학연구원 26.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10. 14. (월) 10:00	1. 방송문화진흥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회	
감사종료 후	※ 업무현황보고 : (주)문화방송	상암 MBC 경영센터	비공개
10. 15. (화) 10:00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한국정보화진흥원 5. 한국데이터진흥원	국 회	
10. 16. (수)	현장시찰		
10. 17. (목) 10:00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국 회	
10. 18. (금) 10:0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 회	[종합감사]
10. 21. (월) 10:00	1. 방송통신위원회 2.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통위 / 원안위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 회	[종합감사]

## 6.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기관장 차량의 휴일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정당한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관련 진흥원에 12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이 많은데 우수 인력 확보와 인재 육성을 위해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관련 진흥원의 이사회 체제의 유지 여부와 유지 시 개선 방안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li> <li>○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중점 연구 분야가 바뀌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노력 필요</li> <li>○ 정권이 바뀌어도 출연연 기관장이나 과학기술원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노력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국무회의 또는 각 정부 부처 사이에서 연구개발, 실물경제, 산업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산하 공공기관에서 파견직 근로자의 파견계약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실태 점검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된 5대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산업진흥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이끄는 핵심 부처로서 개인용 컴퓨터(PC)에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윈도우 7 개인용 컴퓨터(PC)를 모두 교체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과 R&amp;D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혼란 해소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지능형 로봇, 가상·증강 현실, 혁신 신약,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의 선도적 주도 필요</li> <li>○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활동이 세미나 등에 그쳐 출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 위원회 재개편 필요</li> <li>○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과제를 맡았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징계조치 및 연구비 환수 필요</li> <li>○ 고위공직자 자녀·친인척의 납품 수주 특혜 방지 필요</li> <li>○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초교양과목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교양교육 커리큘럼 개발 선도 필요</li> <li>○ 산하기관의 전문가가 사외이사 활동에 참여할 때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li> <li>○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이 자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li> <li>○ 6개 기관이 과기정통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통화료 지원 시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했으므로 관리 필요</li> <li>○ 기관별 R&amp;R(Role and Responsibility)의 확립 및 기관 간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 관련 5개 진흥원의 통합 또는 협업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윤리 의식을 고양시켜서 부정한 연구자가 연구에서 배제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피폭 조사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예외 업종에 연구개발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li> <li>○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5G 기지국 설치사업 투자세액공제</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요율 확대 및 시기 연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 내 5G 기지국 설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국공유지 사용료 산출 필요</li> </ul>
<정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의 직제 개편 과정에서 네트워크정책실과 그 산하의 정책관의 명칭이 행정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변경 검토 필요</li> </ul>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구속성 원조로 적정기술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가 에티오피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으로 그 수가 부족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적정기술거점센터 추가 개소를 위한 노력 필요</li> <li>○ 2002~2005년에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화산지진, 가스, 지각변형 등 심각한 화산 분화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과기정통부가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분화할지에 대한 예측 연구와 남북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의료 사각지역에서 모바일 진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전염병과 의료 정보를 누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경제 협력을 준비할 필요</li> <li>○ 남북한 간 다양한 협력 채널들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표준 비교 및 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할 필요</li> <li>○ 남북 과학기술인 간의 기초과학 기술 교류나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li> </ul>
<기초원천연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 10년 동안 1조 1,600억 원 규모로 약 7,000개의 과제에 집행되었으므로, 연구부정 예방을 위해서 사업 과제 조사를 거쳐 연구부정 행위 처벌 필요</li> <li>○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대상 연구비, 연구 결과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li> <li>○ 융합기술시대에 발맞춰 무인비행장치(드론) 원천기술 확보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농촌의 5G 인프라 구축 및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를 DNA+ 드론기술개발 사업에 반영할 필요</li> <li>○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amp;D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초</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원천 기술 투자 사업을 담당해서 산자부의 단기사업과 차별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실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과기정통부의 제도 개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로봇용 초경박단소 고정밀 감속기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이미 시중에 하모닉 감속기를 제작하는 국내 기업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국내 기업 정보 파악 필요</li> <li>○ 수상태양광의 반도체 칩이 해양·수자원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에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수소 생산과 저장 연구개발(R&amp;D)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그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 내에 연구부정과 연구윤리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제1차관실·과학기술혁신본부 각각 사무관 1명이 연구윤리를 부수적으로 맡고 있는 것은 부적절</li> <li>○ 부실학회 참가자의 출장비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회수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연구비 횡령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할 필요</li> <li>○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으로 선정되어 170억 원 정도 투입되었다가 실패한 신라젠 펙사백,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조사 지휘 및 연구지원금 회수 필요</li> <li>○ 한국연구재단의 감사 능력 증진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조직 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li> <li>○ 부실학회 출장비 회수에 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대한 결정이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개선 필요</li> <li>○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재심위원회가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직권 취소한 것은 부적절</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과학연구원이 2017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대처해서 피해자인 연구원이 울산과학기술원을 자퇴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감사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한국연구재단의 최근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 성과의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교육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li> <li>○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과기정통부 내에 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li> <li>○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부실학회·학술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평균보다 높은 사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계획·가이드라인·참가자제리스트 마련 등을 진행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li> <l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산업수학과 의료수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예산·인력 지원을 검토할 필요</li> <li>○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임무가 상이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로 있어서 산업수학 수행에 제약이 많으므로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 등 협력 연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정부의 인공지능(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수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역할을 점검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한국뇌연구원과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에 구축된 치매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할 국가 치매연구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국가 슈퍼컴퓨터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할 필요</li> <li>○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 체계적인 중개연구가 필수적이므로, 과기정통부가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ul>
<거대공공연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활성화 대책 필요</li> <li>○ 우주개발 정책 관련 논의가 단절 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활동기간에 차이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연초에 발표한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민간주도 뿌리산업 성장을 추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공정한 우주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화·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li> <li>○ 우주개발 기반 조성 국제협력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므로, 과기정통부의 노력 필요</li> <li>○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이 절대적인 바, 과기정통부가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루나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li> <li>○ 우주 사업의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30%인데 이는 방위사업청의 국방 획득 사업에 비하여 높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지체상금 기준을 내리고 입찰 가격 하한선을 올리는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li> <li>○ 품질이 중요한 우주 사업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국방획득 사업처럼 낙찰 하한율을 올리고 기술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li>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주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2021년 초소형 위성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의 예산 지원 방안 모색 필요</li> <li>○ 천리안 위성 2A호 발사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항공우주연과 경희대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저비용 소형 발사체 개발과 초소형·소형 위성 발사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li> <li>○ 소형 발사체 제작 활용에 있어서 단순 발사보다는, 향후 활용성·경제성이나 시장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정책 검토가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초소형 발사체의 연소 시험장 구축에 따른 부지 문제를 고흥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li>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달 탐사에 관해 제기한 중량·연료용량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과기정통부·항우연의 문제 정리 및 대책 마련 필요</li> <li>○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한계, 미국 항공우주국 협의 등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므로, 과기정통부가 우주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li> <li>○ 달 탐사 사업 관련 대면회의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이 제안한 방안이 과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사업 평가단에서 검토된 사업 위험 해소 방안의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된 사안이라면, 과기정통부가 당시 담당자를 포함하여 향후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궤도선, 연료 버짓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li> <li>○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직급 간 소통 문제와 이견이 존재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개선 노력 필요</li> <li>○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산업 기초연구의 직접 지원을 위해서 국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운영 로드맵의 신속한 제작 필요</li> <li>○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 수요 인프라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를 감</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안하여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를 건립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의학 실용화센터 구축 및 노후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2020년 사업비에 국비 280억 원을 반영할 필요</li> <li>○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원전지역 방사능 재난대응 역할 강화를 위한 방사선실용화센터 구축과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2020년 예산으로 정부 출연금 175억원 반영에 노력</li> <li>○ 과기정통부가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의 연차별 예산 계획에 따라 2020년 사업비에 국비 280억 원을 반영할 필요</li> <li>○ 2019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취득 이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과기정통부가 이월 사업비를 활용하고 2020년에 필요한 예산 268억 원을 확보할 필요</li> <li>○ 2019년 5월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과기정통부가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사업 착수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이월사업비 지급 등을 우선 추진하며,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020년 예산 38억 원을 확보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기구 등의 방안을 건의할 필요</li> <li>○ 국가 정책인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상북도·경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국가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검토 필요</li> <li>○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 기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과기정통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지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추진할 필요</li> <li>○ 방사광 가속기 설치를 기획할 때 배타적이지 않으며 많은 지역·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노력 필요</li> <li>○ 서남권 역시 영광 한빛원전 6기와 중국 101개 원전으로 인하여 원자력 의학원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지역 균형을 감안해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을 발생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협력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준비할 필요</li> <li>○ 북한이 방출하는 방사능 문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조사 필요</li> <li>○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핵 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피폭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 비용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협의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직할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북한이탈주민 피폭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핵 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피폭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li> <li>○ 풍계리 탈북민 방사선 피폭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폭 의심자 9명 중 8명이 길주군 인근 출신이므로, 과기정통부가 피폭의 원인을 핵실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li> <li>○ 과기정통부가 신속히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유해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폐패널 처리(재활용, 유해물질 정화 등)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li> <li>○ 태양광 폐패널의 중금속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사회문제 해결 R&amp;D 자금 활용 필요</li> <li>○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R&amp;D’,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과기정통부의 주제와 과제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li> </ul>
<p>&lt;과학기술 일자리혁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블유에프엠(WFM)의 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서 발급은 관계 법령에 의해 과기부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한 것이므로, 잘못된 인증서 발급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후속 조치 필요</li> <li>○ 과기정통부의 주도로 출연연에서 수요기업과 중소기업을 잘 연결하여,</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제품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의 요구수준을 잘 전달하고 이러한 요구에 중소기업 제품이 잘 부응해서, 해당 제품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이 낮은 문제, 피인용 횟수가 적은 문제, 기술이전 계약 건수의 감소 문제 해소 필요</li> <li>○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 System) 폐지 및 연구행정 효율화 문제 해결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지역 분원 설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운영 규칙 개정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해서 분원 통합이나 기능 재조정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li> <li>○ 출연연이 향후 닥칠 수 있는 기술 종속의 위험(risk)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역 조직처럼 역할이 필요한 분원도 있으나, 그밖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각 출연연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출연연이 연구단지로 만들어진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출연연의 간접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직접 연구개발(R&amp;D)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일 법인화 등 출연연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li> <li>○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정량 요건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4개 시도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권역별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량 요건 완화 필요</li> <li>○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서 출연연의 인건비가 대폭 늘고 주요사업비가 줄었으므로, 국가가 범정부적으로 인건비 부담 필요</li> <li>○ 출연연의 개선을 위해서 기본 출연금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 규제를 풀어서 개별 연구소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 예산 중 직접 R&amp;D 예산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li> <li>○ 출연연의 간접비용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통계 수치를 면밀히 검토 및 관리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현재 논의 중인 출연연 감사 기능 일원화 과정에서 감사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검사 출신을 감사단장 및 감사위원으로, 검·경·감사원의 수사관·조사관 출신을 감사단원으로 포진시킬 필요</li> <li>○ 활동이 거의 없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과기정통부의 연구소 인정 취소 검토 필요</li> <li>○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가 직권취소 외에 환수, 과징금 징수 및 형사 처벌 등 제도 신설·개선을 검토할 필요</li> <li>○ 출연연 과학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정년 연장 등의 획기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li> <li>○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지원을 검토할 필요</li> <li>○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사하므로 중복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통합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기반으로 구매되는 고가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의 간접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통폐합·단일법인화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부실한 인턴 관리와 증명서 발급 날조 의혹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조사 필요</li> <li>○ 3년 내로 무상 대부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출연연 지역 조직이 9곳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필요</li> <li>○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기획재정부가 토지</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각각 반대하므로,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출연연 지역 조직의 20년 기간의 제한 없는 토지 무상 사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규정이 일몰되면서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출연연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서 연구 몰입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제도 정비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연구소기업에 대한 경영 불간섭이 관행이어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생기면 제어 수단이 부재하므로 과기정통부가 행정 조치 및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식품연구원의 구 사옥 매각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의 기관별 R&amp;R(Role and Responsibility) 재정립을 통한 수익 구조 포트폴리오 추진이 출연연의 연구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속도 조절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파견 용역직 노사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li> <li>○ 출연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이 5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출연연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li> <li>○ 출연연은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타 공공기관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장애인 고용분담금 지원, 학생연구원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의무 고용률의 차별적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출연연 연구원의 외부 활동이 다소 많은 편이고 이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내부에서 연구하는 직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관별 R&amp;R(Role and Responsibility) 재정립 강행 등으로 인하여 출연연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시행 이전에 예산·인력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지원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li> <li>○ 출연연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정년 연장, 성실 실패 인정,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li> <li>○ 연수 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레이더 탐지 실증 실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비가 부족하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추가 확보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강소특구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li> </ul>
<미래인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수천억의 안전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구실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연구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li> <li>○ 지하 연구실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연구실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연구실 환경에 관한 점검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국내 석박사 감소와 외국인 학생 증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과기정통부·산하기관·출연연 차원의 장기 계획 수립 필요</li> <li>○ 광주 내 인접한 위치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한전공과대학교의 통합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비정상적인 수의계약 증가와 수의계약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특정감사 실시 필요</li> <li>○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뒷받침 노력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4대 과학기술원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업 촉진을 우선시하되,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li> <li>○ 과학기술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원 통합이사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4대 과학기술원 업무 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확장·재편할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중심의 협업 모델 구축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지원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의 연구비 해외 유출 혐의와 배임 혐의를 이유로 한 직무정지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원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협약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향후 협약 이행 사안의 개선 방안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의견을 청취할 필요</li> <li>○ 한국과학영재학교 운영 목적 및 지침 정비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반감사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가 해당 징계위원회 구성이 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li> <li>○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감사가 연속되고 있는데 소위 찍어내기 감사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보강 필요</li> <li>○ BK21 사업은 4대 과학기술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간의 협의 필요</li> <li>○ 연구실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출연연 등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를 감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공계 대학원 경쟁력 확보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인원 2,50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전문연구원 제도 개선에 대하여 무시험 선발이나 국방·공공 연구개발 (R&amp;D) 과제 2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리는데, 과기정통부가 과학 연구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도록 노력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지적 받아온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출퇴근 기록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전문연구요원의 부실복무를 방치·방관한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처장의 직책 수당과 관공비를 자체적으로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 행동강령이나 「근로자참여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 필요</li> <li>○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나타나는 관피아 출신들의 방만 학사 운영과 경영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학사 행정 정상화를 위하여 조치할 필요</li> <li>○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재직 인력·여성 보직자 비율 등의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노력할 필요</li> <li>○ 국립부산과학관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국 학교의 교육 캠프 참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2020년 예산 125억 원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2020년부터 시행될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며,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도 같이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기술사의 육성과 관리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인 「기술사법」으로, 배출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다른 전문 분야처럼 단일화가 필요</li> <li>○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벡터와 행렬을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도록 과기정통부가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li> </ul>
<정보통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 검색순위를 이용한 시위문화는 집회·결사 자유의 법적 권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 지양 필요</li> <li>○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조작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구글처럼 실시간 검색어 자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에 관하여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li> <li>○ 포털 사이트 상 매크로사용·어뷰징·계정불법활용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단속 필요</li> <li>○ 조직적 조작과 지령성 게시글에 대하여 포털 차원의 모니터링 등 자율 규제체계가 필요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사회책임투자(SRI)·분권화 측면에서 지역 여론이 무시되지 않도록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2018년 기준 50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수가 1,752개로 사이트당 평균 3.5개라서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자율주행 차량 통신신호 방식으로서 국토교통부의 WAVE 방식과 과기정통부의 5G-V2X이 상이해서 국가적 낭비가 예상되므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정부부처 간 협의 선도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자율주행 차량 통신신호 방식의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하여 WAVE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5G-V2X에 집중할 필요</li> <li>○ 구글이 한국에서 1,900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기업 매출을 확인하고 조세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li> <li>○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규제 샌드박스에서 가</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임시허가가 1건에 불과하므로 관련 제도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홍보 노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농수산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수적이므로, 과기정통부가 농수산 분야에 대한 사업의 진행을 고려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고 빅데이터 산업 연구 인프라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8:2에 이르는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가로막는 편중된 비율이라는 지적 존재</li> <li>○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특례 부여 이후에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과기정통부가 이를 문제 삼아 특례 지정을 보류하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기존 규제 개선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존재</li> <li>○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허용해주는 과제들이 외국에서는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제도가 도리어 산업의 후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제도 자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법률상 보장할 필요</li> <li>○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다른 분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임시허가 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각종 융합 갈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과 기민한 협의를 거쳐서 중재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li> <li>○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극적인 과의존 대응이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정보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고령 세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체 징계요령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정성과 내부 기강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가 2001년부터 추진해온 정보화마을 사업을 흡수해서 함께 활용할 필요</li> <li>○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폐지와 알고리즘 공개 문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관심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국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실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한국형 퀀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자 정보통신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하여 타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li> <li>○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연령별 맞춤 교육계획을 설계할 필요</li> <li>○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액티브X뿐 아니라 웹 표준에 맞지 않는 실행파일을 제거해야 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예산은 1.58억원으로, 향후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예산·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li> <li>○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체·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li> <li>○ 스마트도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과기정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후속 지원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li> <li>○ 우정사업본부의 우정 노사 합의 이행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인력 채</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용 및 운송수단 확보 추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소형 전 기자동차 보급을 검토할 필요</li> <li>○ 집배 보로금을 증액하여 집배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 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필요</li> <li>○ 우정사업회계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 률을 낮추게 되면 정기간행물 주요 구독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부담 이 되므로, 우편요금 인상안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재검토 필요</li> <li>○ 우정사업본부의 인사행정에서 집배원 같은 현장의 기능직 직원에 대 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감독 필요</li> <li>○ 초소형 전기차 사업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체국 의 배달·집배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계획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별정 우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근속승진 도입이나 당연퇴직 조항 개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li> <li>○ 우정사업본부가 130조 원의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과기정통부 가 담당 실무자를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여 전문가들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이륜차 적재 안전 기준 마련에 협조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숙원 사업인 주택청약통장 개설을 위하 여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li> <li>○ 민간의 블록체인 자격증 인증에 대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 기정통부의 관리·감독 필요</li> <li>○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시행에 발맞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자율주 행 자동차의 윤리적인 설계 기준을 만드는데,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가 지침을 제시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lt;인공지능기반 정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관련 조직 마련의 신속한 확정 필요</li> <li>○ 인공지능 운용 및 연구개발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단지의 예산 과소계상 문제 해결 필요</li> <li>○ 과기정통부의 신속한 인공지능(AI) 로드맵 제작 필요</li> <li>○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외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 수립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윤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과 함께 기업, 기관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 여건 개선과 같은 미시적인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신속히 인공지능 관련 조직을 직제화 해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공개하도록 추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거래소 개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인공지능(AI)의 최대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리터러시(literacy) 정책을 인공지능(AI)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킬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li> <li>○ 인공지능·블록체인·데이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li> <li>○ 인공지능(AI) 스피커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가 KT의 기가 지니뿐 아니라 다른 업체로도 확산되도록 과기정통부가 노력할 필요</li> <li>○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입법 방향에 발맞춰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감시·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딥페이크 관련 오픈 소스를 이용한 허위·조작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li> <li>○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딥페이크 관련 실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필요</li> <li>○ 가명정보를 상업적 연구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같은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노력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2018년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파트 공모직 채용 과정의 의혹 요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li> </ul>
<p>&lt;소프트웨어정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딩 민간자격 남발 관련 과기정통부가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과기정통부가 센터별 자력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2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광주 가상현실(VR) 체험관에 하루 방문객이 3~4명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과기정통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소프트웨어의 저변확대, 교육 및 인재육성, 제값 받기, 클라우드 기술역량 향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부족,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투입 예산의 원천기술 확보에의 사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소프트웨어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li> <li>○ 「소프트웨어산업법」이 전부개정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가 국제 표준에 맞는 작업과 후속 조치를 준비할 필요</li> <li>○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대다수가 수도권 기업이므로 과기정통부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배려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주도로 「소프트웨어산업법」을 통과시키고 인력을 육성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에 관하여 범부처적으로 최고 정보 책임자(CIO)와 최고 기술 책임자(CTO)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li> <li>○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amp;D)은 단일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초기 버전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기술을 누적하는 연속성과 연구인력이 사업화까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과기정통부의 지원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 기초연구·응용기술·사업화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단계를 이어줄 전담조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인공지능전문대학원처럼,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SW) 보안 관련하여 소프트웨어(SW)품질 관련 중점대학·대학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운영 체제(OS)를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행정안전부를 대신하여 국산 운영 체제(OS) 이용 확산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추진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혁신 인재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 기관을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외의 전문 기관으로 확대하거나 완전 개방하여, 인증 획득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 품질 활동 관련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를 지원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 산하에 가칭 국가소프트웨어(SW)품질관리원을 신설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에 소프트웨어(SW)품질센터 또는 소프트</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웨어(SW)품질관리 전담사업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기술(ICT)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입찰에서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주권과 보호를 고려해서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li> <li>○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사업이 마케팅 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IaaS) 중심이고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이 부족하여 클라우드 지원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므로, 과기정통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라이선스 비용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외 로열티 지급 사례 등에 대하여 보고할 필요</li> </ul>
<p>&lt;정보통신산업 정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개발 중인 28GHz 대역의 5G 장비가 세계 최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국내 무선국·교환기·중계기 등 통신장비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li> <li>○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상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예비전원 설비 설치의 면제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적용 지침 등의 부재로 해석이 모호하여 위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설비 예비전원 규정 개선 연구반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상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예비전원 설비 설치 규제 정비 과정을 수행할 필요</li> <li>○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과기정통부가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협약을 거친 후, 기존 중계기에 주파수 28GHz의 5G 송신기를 우선 설치하여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응할 필요</li> <li>○ 5G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5G 플러스 전략을 추진·점검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7,000억 원을 4년에 걸쳐 융자했던 것에 비추어, 5G 기지국 설치 촉진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li> </ul>
<p>&lt;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 기기의 보안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IoT 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진흥·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로 사물인터넷(IoT) 보안 점검을 포함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할 필요</li> <li>○ 통신사 및 인공지능(AI) 스피커 제공 업체가 인공지능(AI) 스피커 이용자에게 프라이버시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검토할 필요</li> <li>○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시행 시 해킹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li> <li>○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같은 사이버 공격,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문제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국민 홍보 및 방지 조치 필요</li> <li>○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도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과기정통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li> <li>○ 과기정통부 산하에 충무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기관이 스무 곳이어서 전시 정보통신망 보호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기관별 충무계획 점검 필요</li> <l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5G 네트워크 보안 관련 연구개발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관련 논의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필요</li> <li>○ 윈도우 7의 제품 지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과기정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PC) 상당수가 교체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대비책 마련 필요</li> <li>○ 보안 우려와 보안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증가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대책을 찾을 필요</li> <li>○ 과기정통부의 정보 보호 기능을 네트워크실의 조직으로 통합시키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것에 대하여 사이버 보안을 경시하는 직제 개편이라는 우려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연결 사회에서 국민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로서 사이버 보안청을 설립하여, 유사시에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이 대응하고 협력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지역 영세 중소기업의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지원할 지역 정보보호 기업 육성센터를 건립할 필요</li> <li>○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할 필요</li> <li>○ 서울특별시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이 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와 보안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 정보보호진흥센터의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li> <li>○ 정보통신기술(ICT) 보유현황에 맞는 차등화 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하므로,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안전망 구축 수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스마트폰의 적합성 인증 기관으로서 삼성 갤럭시 S10 및 갤럭시 노트10의 내장형 지문 인식 보안 문제에 대하여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li> <li>○ 화웨이 제품의 보안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에 화웨이를 참여시켜서 보안에 대하여 철저히 재검증한 후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li> <li>○ 사이버 보안 분야의 부진으로 인하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기술 준비 지수가 하락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네이버 계정 무한 생성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발 빠른 차단 조치로 피</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피해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의 5G 장비가 시큐어 코딩의 기본 사항을 지키지 않고 보안 톨의 경고 사항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점검할 필요</li> <li>○ 화웨이의 5G 장비의 논란 사항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5G보안협의회의 소스 코드를 활용한 상세한 검증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다크 웹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면 감시를 강화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협조 필요</li> <li>○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모든 회사의 5G 장비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li> <li>○ 산업계 수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적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5G 기지국의 예비전원설비 설치 규정이 지나친 중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ul>
<통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5G 서비스의 시장경쟁력이 높는데, 일본 수출규제 아래 5G 기술 선점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5G 논의 활성화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논의와 접목 필요</li> <li>○ 자급 단말 유통 확대를 위하여 「단말기유통법」에 자급제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조수입업자에게 연간 보급하여야 할 자급제 단말 목표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자급제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li> <li>○ 최근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실적 수당 명목으로 이용자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과기정통부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처벌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연구 실시 및 규제 강화 필요</li> <li>○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제화 필요</li> <li>○ 3.5GHz 대역 단말기 구입자가 5G 28GHz 대역에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소비자 사전 고지 등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현재 판매 중인 단말기는 28GHz 미지원 상태이므로, 제조사가 이를 단말기 제품에 명시하게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개통 시에 고지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검토할 필요</li> <li>○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포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개통 전 타사 회선 가입 현황을 조회하여 이상 가입 패턴을 보이는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중한 본인 확인이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li> <li>○ 이동통신 사업자 간 가입 회선 수 조회 시스템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를 활용하여 가능하므로, 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포폰 유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긴급입찰 실시, 면허기준 완화, 메가크래프트의 1차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등의 논란 사항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종합감사 전까지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 진행 필요</li> <li>○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권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향후 조국 펀드의 관급 공사 수주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과기정통부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할 필요</li> <li>○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의 인터넷 상호 접속 문제에서 과기정통부의 이견 조율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속 인터넷 보편 서비스의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 과기정통부가 국민의 인터넷을 누릴 권리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필요</li> <li>○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높으므로,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li> <li>○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및 국내 단말가격 부담 해소를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내의 질 좋은 휴대폰이 국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li> <li>○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통신감시는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되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법체계 정비 필요</li> <li>○ 외국 저가폰이 들어올 때 한국형 VoLTE가 장벽이 되어 월 2만 원 이상의 통신비 상승효과로 통신비 절감 정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5G 보급형 단말기가 지나치게 비싼데, 5G 단계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본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G 보급형 단말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5G 통신망 구축이 전 지역에서 빌딩이나 지하철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중재 필요</li> <li>○ 5G 기지국이 없는 청주·제천·충주 같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5G 가입 단말기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조치 필요</li> <li>○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현실화 결과로 산정 기준이 정액제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면, 통신사업자의 망 구축에 부담이 가중되어 5G 상용화를 위한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대책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li> <li>○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LG유플러스와 결합까지 논의되고 있어서, 알뜰폰 개별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의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의 최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정부·기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보이므로, 알뜰폰 사업자의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정부, 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간 정기 회의를 추진해서 알뜰폰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정부 주도의 시장 개선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li> <li>○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복잡한 통신비 감면 제도를 통합·단순화해서 요금제에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li> <li>○ 국민의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 방향을 유선 전화 중심에서 이동전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li> <li>○ 거주 지역에 따라서 시내전화 요금 부담에 차별이 없도록, 과기정통부가 시내전화 요금 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li> <li>○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3사 통신 사업자의 도매·소매 겸업에 대하여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내구재 대출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 행위이므로,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실태 조사 및 단속 필요</li> <li>○ 통신 품질 평가의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해서 15·16으로 시작하는 대표전화의 요금 부담 주체를 발신자에서 수신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민원인의 통화료 부담을 절감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이 먼저 수신자 부담인 14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도입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능망 대가’를 인하여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망 사용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의 망 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스타트업을 위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며, 인터넷 상호 접속(IX) 제도 같은 보완책이 없어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무임승차가 발생했으므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li> <li>○ 010 번호를 이용한 중국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 국제전화 여부를 표시해주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요금 인가제를 고수하고 SK텔레콤의 요금제들을 다른 모방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요금 인가제·유보신고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대안으로 보험·계약 업계에서 활용되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요금제를 개발한 통신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판매 권리를 제공해서 요금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li> <li>○ 5G의 경우 일본에 비하여 이동통신 상품, 서비스의 역동성이 뒤쳐지는 형국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대표적으로 낮은 규제인 요금 인가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도매요금 인가제·도소매 겸업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li> <li>○ 연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이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li> <li>○ KT가 아현국사 통신국 화재 이후 청문회에서 비난연 재질의 제어반 전체를 교체하겠다고 답변해놓고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206만 명이 긴급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과기정통부 및 유관 부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li> <li>○ 스마트폰 AS 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센터가 부족한 문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국민들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사설 수리업을 양성화하고 사제 부품 사용을 인정할 필요</li> <li>○ 제조사 이외의 수리 정책을 도입할 때 수리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li> <li>○ 스마트폰 구매 후 서비스(AS)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방송진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 대기업의 유료방송 인수합병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사내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려 필요</li> <li>○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li> <li>○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이 협회 정관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조치 필요</li> <li>○ 홈쇼핑 방송에 대한 스마트폰 결제가 모바일쇼핑 매출로 인식되어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제도개선 검토 필요</li> <li>○ 2018년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케이블TV·IPTV에 납입한 송출수수료가 1조 6,337억 원으로 전체 홈쇼핑 방송 매출의 46.8%에 육박하여 과다하므로, 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채널 연번제·채널 순환제 등 제도 도입 검토 필요</li> <li>○ 최근 5년 동안 IPTV 송출수수료의 연평균 인상률이 42%로 매우 과도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인상폭 조절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결합 심사에 대하여 시장 채편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li> <li>○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국방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소식통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국방 TV를 공공 채널로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li> <li>○ 케이블 종합 유선 방송(SO)이 홈쇼핑 채널을 앞 번호에 배치하는 것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검토 필요</li> <li>○ 현재 홈쇼핑 채널이 17개로 과다하여 시청자의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데이터 홈쇼핑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접점을 찾을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유통 약자들을 위하여 다중융합채널의 허브로서 데이터 홈쇼핑 채널 증설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텔레비전 홈쇼핑과의 구분을 근거로 데이터 홈쇼핑의 생방송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도와 기술 융합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입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현재 데이터 홈쇼핑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조정 또는 문호를 넓힐 필요</li> <li>○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에게만 생방송 편성을 금지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경쟁을 부정하고 「방송법」 제4조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잘못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철폐·개선할 필요</li> <li>○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은 주식 인수 형태의 결합이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달리 심사 절차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의 지역성·공공성에 관한 몇 가지 조사를 받지 않으므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5%, UHD 직접 수신율은 0.1%에 불과하므로 과기정통부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할당한 UHD 주파수를 회수할 필요</li> <li>○ 종편 의무 편성 채널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 이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칠 필요</li> <li>○ 유료방송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지역성 문제, 개별 종합 유선 방송(SO) 보호, 경쟁 구도에 대하여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li> <li>○ CJ 등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규제 대상이므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동으로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li> <li>○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를 산정 시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협의를 거쳐 혼선을 방지할 필요</li> <li>○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재허가가 취소된 채로 1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므로 시청자·소액 주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릴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재송신료를 둘러싼 지상파 3사나 종편 사업자와 종합 유선 방송(SO) 사업자 간의 법적 분쟁을 조정할 필요</li> <li>○ 대법원이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 방식의 서비스의 가입자를 디지털HD 가입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음에도,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사업자에게 재송신 비용(CPS)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li> </ul>
<전과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시 백팩형 이동기지국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전파법」상 규제 완화 필요</li> <li>○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전파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li> <li>○ 자기적합확인제도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토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과기정통</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에 대한 현재 유일한 방어수단인 전파 차단이 「전파법」에 의거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상황이므로, 과기정통부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li> <li>○ 드론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특히 북의 군사 도발이 빈번한 우리 안보 상황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은 물론, 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무선국 검사비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처럼 매 3년마다 수수료의 요율이나 금액을 결정했을 때 그 내용을 공개하는 의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으로 관리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실시하는 무선국 허가 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현재 한 달에 1만 5천개 가량의 기지국이 구축되고 있으며, 5G 기지국 한 대를 설치하여 서비스하는데 기지국 구축 절차를 제외하고 사전심의, 준공심사 등 4단계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기정통부가 5G 조기 구축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li> <li>○ 현재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5G 기지국 준공검사에 속도를 낼 수 없으므로, 과기정통부가 무선국 검사 기관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무선국 검사 기관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5G 송신기의 28GHz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활동 확대 필요</li> <li>○ 향후 도입 예정인 5G 송신기의 주파수 28GHz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5G 송신기의 전자파 유해성 여부 검사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 검사와 동시에 진행하여 비용 절감 가능</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X 번호 자원을 활용하고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2G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4개의 주파수 대역 가운데 3개가 군 주파수와 겹치거나 인접하므로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혼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불법 통신 기자재 적발이 늘어났고 품목도 다양해졌음에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의 단속 인력이 46명에 불과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증원을 위한 노력 필요</li> <li>○ 주파수 경매 제도, 할당 대가 산정 문제, 재할당 문제, 유통 과정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전반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구조 개선안 마련 필요</li> <li>○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무선국 준공 신고가 들어오면 45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하고, 45일 이내에 못해 주면 검사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li> <li>○ 함박도에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교란 시설을 설치하고 북한의 교란 전파로부터 인천공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관계 부처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li> <li>○ 고출력전자기파(EMP) 방호기반 조성 사업에 관하여 기준 마련이나 취약점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과기정통부가 실제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또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전자파 차단제품 모니터링 및 성능 검증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조치 등을 위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li> </ul>
<과학기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공동관리 규정인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과 각 부처 전문기관별 R&amp;D 법령·매뉴얼 151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부처와 연구자들 간 R&amp;D 관련 협업의 촉진을 위해서 관리 규정·지침 제도화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R&amp;D를 선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외부 민간전문가 영입 규모 확대 필요</li> <li>○ 각 부처·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심의회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문가들이 국가 연구개발 기획과 예산을 주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내 회의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amp;D) 예산을 투입할 때 현실 적용 문제를 고민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기본법」상 성장동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된 성장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amp;D)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존재</li> <li>○ 과기정통부가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필요</li> <li>○ R&amp;D 센터나 첨단기술산업 전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구개발비지원·조세감면을 활용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소재·부품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기관과 산업체의 생태계 유지와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소재 산업 관련 원료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한일 무역 분쟁 이후에 지역별로 방사광가속기·중이온가속기 같은 대형 연구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 연구개발(R&amp;D)이 선행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노력 필요</li> </ul>
<p>&lt;연구개발투자 심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amp;D) 과제의 협약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li> <li>○ 의공학 기술 중개연구 사업은 병원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정의견은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과기정통부 안에서 중개연구에 관한 관점이 확대될 필요</li> <li>○ 연구개발(R&amp;D)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이용할지라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R&amp;D)의 예산 편성에 대해</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여 기획재정부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R&amp;D 예산이 20조 원을 넘었지만 그 증가율이 총예산액 증가율이 미치지 못해서 실제 연구 현장에서 예산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예산 확보 노력 필요</li> </ul>
<성과평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amp;D) 감사가 단순 사후 회계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질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li> <li>○ 경제 성장을 고려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의 총사업비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법안 발의 필요</li> <li>○ 예비타당성조사 및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완 대책 마련 필요</li> <li>○ 과학기술 R&amp;D가 상용화(commercialization) 및 이익(profit)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사업화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li> <li>○ 연구 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연구지원 인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필요</li> <li>○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비와 연구 재투자로 배분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다른 나라의 공공연구 관련 사례를 검토할 필요</li> <li>○ 연구 관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예산 분배, 기획, 연구 풍토 개선, 성과 확산을 총망라하는 것이므로, 과기정통부가 주도하여 연구 관리가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다년도 연구 시 부처의 승인 없이도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선집행하여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탄력적 제도를 도입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기술이 아닌 사람을 확보하는 정책을 설계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연구개발 국내 등록 특허 성과는 8만 건인데 특허권을 연구기관으로 넘겨서 국유화 특허 비중이 2.2%에 불과하므로 과기정통부의 점검 필요</li> <li>○ 과기정통부가 연구 과제 제출 서류를 검증하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li> <li>○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혼란스러운 것은 연구윤리 규정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에 있다는 점이므로, 두 부처 간 규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li> <li>○ 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지양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방침이 있는데, 기초연구 같은 특정한 연구는 중복연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해야 할 필요</li> <li>○ 최근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지원시스템(PMS)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대국민 포털 서비스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시스템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존재</li> <li>○ 연구개발(R&amp;D) 연구자 연구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공유의 무화 방법을 찾을 필요</li> </ul>
<p>&lt;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2021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되어 우리나라 기초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예산 확보와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li> <li>○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사업 지연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li> <li>○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성능 활용에 부작용이 없도록 중이온 가속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일정 검토가 필요</li> <li>○ 중이온 가속기 사업을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가속기 운영 방법 및 산업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의 SCL3 중이온 초전도 가속기 구축과 관련하여 초전도 가속 모듈이 22개가 완성되어야 함에도 아직 1개만 반입되었다면, 2021</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년 완공까지의 일정에 차질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정통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담당 직원들이 연말에 다른 곳으로 순환 발령이 되지 않고 중이온 가속기 완성까지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2021년 완공까지 책임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li> </ul>

## 나. 방송통신위원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lt;일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중재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여 미디어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에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 건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3월에 일부 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찰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필요</li> <li>○ 지역 방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사 출신 인물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참여를 늘려 대표성 제고 필요</li> <li>○ 각종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정비 필요</li> <li>○ 방송통신 관련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서 지역 활동가, 지역 방송인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필요</li> <li>○ 국제 기류에 공조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세 법제화 관련 검토 필요</li> <li>○ 디지털 신산업 진작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기금 조성 추진 필요</li> <li>○ EBS 이사장의 대선캠프 활동경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이므로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현대자동차의 불법 정보 수집 행위와 이동통신사 3사의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논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원 차원의 감사 필요</li> <li>○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KBS의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필요</li> <li>○ 네이버의 불공정 조사 관련 허위 보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추궁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기가 최소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위</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원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인사 과정에 주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정부가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방송·미디어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li> <li>○ 불법 스팸의 과태료 징수율이 3% 수준으로 저조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li> <li>○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마이뉴스 기자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등재된 것은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법」의 위반이므로 부적절</li> </ul>
<방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 이어폰에 안테나 기능이 없어서 FM 라디오 재난방송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대책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강릉 산불 대처가 미흡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의 재난방송주관사 자격을 박탈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관리 기관과 함께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방송 중계 설비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공영방송의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 필요</li> <li>○ 지역방송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 방송사들의 지역성·공익성·공공성 준수 여부에 대하여 허가나 재허가 심사 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지역방송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역방송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li> <li>○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영상재생(OTT) 서비스가 수도권 방송만 되고 지역방송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지역방송이 공익성, 지역성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시간영상재생(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 필요</li> <li>○ 지역민방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자체편성 비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농·산·어촌지역의 미디어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도 단위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필요</li> <li>○ 지역 방송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이 지원액보다 커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필요</li> <li>○ 높은 망 사용료로 인하여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5G·좋은 콘텐츠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li> <li>○ 새롭게 재단으로 출범한 tbs 교통방송이 현행법에 따라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검토 필요</li> <li>○ 지상파·종편 방송이 재방송을 내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본방송이라고 보고했는데 최근 3년간 방송실시결과보고서에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시정조치 내역 또한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지상파, 종편 방송 모두 초방, 재방 비율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각 장르별 이행 실적까지 점검하여 과행적 편성을 바로 잡을 필요</li> <li>○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그 수준별로 감점이 되는데, 조항별로 감경이나 가점을 적용하고, 특히 보</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도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성 위반사례 적발 시 가중하여 감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을 평가할 때 외주사와의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작가, 스태프 등의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 독소조항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여 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li> <li>○ 방송국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 프로그램이 법적 제재로서 주의·경고를 받고서도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기준 변경·수정 필요</li> <li>○ 통신사가 새로 출시되는 단말기에서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기능을 삭제하는 행위가 통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기능의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과 재난방송 수신 매체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조사에게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설 필요</li> <li>○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듯이 동영상서비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할 필요</li> <li>○ MBN의 차명계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감사 필요</li> <li>○ JTBC의 무상감자 시도와 같은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담하는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필요</li> <li>○ YTN의 변상욱 앵커 복귀는 보도 채널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 필요</li> <li>○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N의 종합편성 허가 시 서류 조작이 발생했으므로, 심사 평가 체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에 따라 허가 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가 비상 경영 체제에 있음에도, 역대 연봉자가 60%를 넘는 등 경영에 부담을 가했으므로, 국민 세금 투입을 지양하고 한국방송공사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이 방송실시 결과보고서의 양식을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류 반려 또는 시정 조치 필요</li> <li>○ EU 등 선진 국가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의한 공정거래·세금·언론정책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li> <li>○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 방식의 비용을 부담한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재송신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방송법」 제6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tbs 교통방송의 재송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와 씨씨에스충북방송 소액 주주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행정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지상파만 재송인을 하고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미디어 비평 강화 정책을 지양할 필요</li> <li>○ 구글이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국내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고 법인세를 내도록 법 개정 검토 필요</li> <li>○ 통신 대기업의 유료방송 인수합병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노동 문제 점검 필요</li> <li>○ 페이스북이 KT에게 접속료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승리를 위한 대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자산인 전파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민방의 소유지분 한도 축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해서 자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공정성·신뢰성을 상실하여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고 중간광고만 확대하고 있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으므로, 공영 방송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폐지를 검토할 필요</li> <li>○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와 수신료를 받지 않는 방송사를 지상파 방송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차별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간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li> <li>○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아서 세원 잠식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점검 필요</li> <li>○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의 합리화·객관화 노력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MBC의 「방송법」 및 방송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직무 유기에 대하여 징계를 검토할 필요</li> <li>○ 5·16 군사 정변 이래 역사를 감안하여 MBC의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li> <li>○ 최근 공영 방송사들이 시청률 하락과 만성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없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li> <li>○ 유튜브, 아프리카TV의 1인 미디어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부담을 지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연구·모색 필요</li> <li>○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문화진흥회의 1년 예산이 50억 원인데 이사장이 3억5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그 역할에 비해서 과도한 수준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감독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 제1TV의 광고 반납에 관한 공영성 규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비 작업 필요</li> <li>○ 난항 중인 UHD 방송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HD 방송에 UHD라는 자막이 표기되는 것은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의 UHD 송신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원하는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국방송공사와 대립하여 UHD 방송이 지연·불발 되면 시청자들의 교육권과 시청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두 방송사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사 재송신 비용(CPS) 인상 계획은 종합유선 방송(SO)에게 부담이 되는 조치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재송신 비용(CPS)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사업자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정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축구 남북전을 앞두고 대행사와 중계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철저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방송법」상 텔레비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의 이행 절차</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를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교통방송이 독립 재단화 후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li> <li>○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tbs 교통방송의 독립 재단화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했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에 부합한 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미디어재단 tbs에 대하여 보도·시사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새롭게 허가 심사를 받고 현행법상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 재단법인화 계획에 따른 이사장·대표이사 선발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의 공무원 신분 제작진들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징계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tbs 교통방송과 협의를 통해서 내규 및 제재 수단을 정립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과 협의를 통하여, 반복된 주의 조치나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지상파 방송사처럼 출연 정지 및 프로그램 폐지 등 내부 징계를 강화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이 다른 공공 방송사들에 비하여 수십 배 많은 민원·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종편과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시 허가가 취소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상황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 취소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과 TBN 한국교통방송 간 업무 중복에 대하여 지적이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복 해소와 효율화를 위하여 TBN 한국교통방송에 교통·기상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MBC 등 공영방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필요</li> <li>○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은 주식 인수 형태의 결합이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달리 심사 절차에서 방송의 지역성·공</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공성에 관한 몇 가지 조사를 받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긴밀한 협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 심사절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심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li> <li>○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대하여 방송의 주요한 가치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예산을 확대하고 차량 수를 늘려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li> <li>○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행 방송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li> <li>○ 아리랑 TV, 언론중재위원회, 국악방송에 연간 500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투입되면서 정작 지역 방송에 대하여 45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 필요</li> <li>○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채널사업자(PP) 예산 지원이 당초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 과정에서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 위반을 이유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li> <li>○ 방송계가 광고주인 사용자에게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노사 문체를 다룰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할 필요</li> <li>○ 국내 실시간영상재생(OTT) 서비스인 웨이브(wavve)·티빙(tiving)·왓챠플레이와 달리, 해외사업자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국내 영업에서 유리하므로 역차별 해소 방안을</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검토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방송사는 UHD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재난 방송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회수할 필요</li> <li>○ 막대한 주파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UHD에 주파수를 분배했음에도 UHD 시청권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 방송사의 책임 있는 UHD 시행을 위하여 근본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교통방송뿐 아니라 CBS·불교방송·가톨릭평화방송 같은 종교 방송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른바 유사보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보조 동의안 규정과 의사진행발언 1회 제한 규정이 강행처리 됐는데, 규정 자체와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반민주적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개정 「방송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의 준수 여부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함에도 해당 기준이 방송평가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홈쇼핑 업계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의 32% 정도를 부담하므로, 기금을 중소 납품 업체 문제나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홈쇼핑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네이버 같은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조치할 필요</li> <li>○ 종편의 의무 편성(must carry) 채널 폐지 문제는 국민의 시청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li> <li>○ 종편의 의무 편성(must carry) 채널 폐지 문제는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에 재갈을 물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겠다는 의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li> <li>○ 유료방송 업계가 송출 수수료를 콘텐츠 산업 발전이 아닌 불법 보조금 유포 같은 불법적인 방편에 사용하여 유선방송 산업 구조가</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흔탁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규제 공백이 이어지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양 부처가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필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증액이 필요함에도 방송사의 문제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그룹별 평가 방식에 의하여 삭감이 되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참작하여 증액을 검토할 필요</li> <li>○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기상 캐스터를 20~30대 초중반 여성을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 여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li> <li>○ 기상캐스터들의 몸매가 너무 드러나는 복장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문 방송인들이 눈요깃거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이용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사업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콘텐츠 임시차단·삭제를 하는 경우에 이의 신청 권한이 없는 콘텐츠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를 심의하는 법적 절차 마련 필요</li> <li>○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할 때 적용한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개선 필요</li> <li>○ 구글 같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국내 대리인 제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점검·단속을 실시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네이버나 구글이 「정보통신망법」 제31조를 위반하고 14세 미만 아동</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조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쏘카·타다 등이 동의를 받아서 블랙박스로 음성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li> <li>○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 플랫폼의 음성정보 수집·보관 등에 관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음성정보가 올바르게 수집·보관·활용되고 있는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검토할 필요</li> <li>○ 댓글을 작성할 때 계정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를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개정해서 명확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li> <li>○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개정해서 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li> <li>○ 틱톡 관련 10대 개인정보·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li>○ 우리카드가 탈퇴한 회원정보 1만 8,000여 건을 파기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을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법 제73조제1호의2를 적용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점검 필요</li> <li>○ 구글이 패스워드 체크업 서비스를 모든 구글 사용자에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불법적으로 유출된 40억 건의 계정정보를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0조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 필요</li> <li>○ 틱톡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가 400만 명 정도인데 그 약관에 의하여 SIM카드·위치정보·IP주소 기반까지 중국 정부로 넘어가서 해킹으로</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밀한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약관에 대한 이용자의 포괄적 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정리 필요</li> <li>○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이 구글의 개인정보 약관 포괄적 동의에 대하여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조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TOSS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구글의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 필요</li> <li>○ 허위·조작 정보를 막는 것이 자칫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말할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조작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스템 구축 필요</li> <li>○ 허위조작정보 전문가회의를 투명하게 구성·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회의를 즉각 폐지할 필요</li> <li>○ 가짜뉴스·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필요</li> <li>○ 법안에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을 정의할 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불법정보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직적 조작·지령성 게시물에 대한 포털 차원의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체계 마련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아프리카TV 내에서 대리 결제를 이용해서 결제 한도를 넘겨 거액의 별풍선을 구입한 사안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먼 리뷰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li> <li>○ 구글의 개선안으로서 옵트인(Opt-in) 기능 추가와 음성정보 삭제 과</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정 간소화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해지 절차의 간소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li> <li>○ 페이스북·유튜브 등 국외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사용료 계약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li> <li>○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 망 사용료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망 사용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장과 유사한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 변경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국내외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여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규제를 회피할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li> <li>○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한국에서만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li> <li>○ 무조건적인 망 이용대가 지불 강제도 문제지만, 5G 시대에 무임승차를 방치하는 것은 산업 혁신의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거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도별 망 이용 단가 계약이 실제 얼마에 체결됐는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은 얼마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 단가 계약의 검증 과정에서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개입이 부담스럽다면 정부·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산업계가 참여하는 제3자 검증체를 구성하여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li> <li>○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 변경 사건이 상호접속 고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고시 개정을 검토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 변경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이 ‘이용 제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수준의 지연은 ‘이용 제한’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li> <li>○ 2018년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같은 서비스 장애 시 보상에 대한 통신사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개선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KT가 이동전화 ‘우수’, 인터넷전화 ‘매우우수’, 초고속인터넷 ‘매우우수’를 받았는데, 평가대상 기간에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한 평가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 필요</li> <li>○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보안 조치 강구 필요</li> <li>○ 유튜브에서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행동에 의하여 노란딱지가 붙은 상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li> <li>○ 우파 유튜버를 조직적으로 찍어내는 시도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악의적 목적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유튜브가 추천 시스템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콘텐츠 배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아프리카TV에서 결제 한도를 넘어서는 대리 결제, 우회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필요</li> <li>○ 조블페이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프로세스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li> <li>○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대리 결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원인이 별풍선 100만 원 한도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과 올바른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li> <li>○ 여러 개의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 TV에서 주문형 비디오(VOD)를 구입하면 같은 가정에서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원회 주도로 증재·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다페스트 협약에 따라 사이버 범죄 관련 각국 공조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긴밀한 협조 필요</li> <li>○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랜덤 채팅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매체물의 속성·목적·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할 필요</li> <li>○ 청소년이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 음란물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애플리케이션 설치율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사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워마드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검토 필요</li> <li>○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차단 수단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치할 필요</li> <li>○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이 심각하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1인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폭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 필요</li> <li>○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과의존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모 교육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침 권고 및 인식제고를 추진하며, 방송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영향력이 강한 1인 미디어 생태계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li> <li>○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사의 결제 서비스·쇼핑몰 등을 검</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색 상위에 노출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 애플리케이션이 오디오 녹음을 허용하지 않으면 접근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위반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필요</li> <li>○ 매년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개선 권고를 하고 사후 관리에도 힘쓸 필요</li> <li>○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악성 댓글의 혐오·차별적인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입장을 개선할 필요</li> <li>○ 온라인상 차별·비하 표현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오프라인으로의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li> <li>○ 고객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통신비 미환급금이 39억 원에 가까우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환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 기간에 댓글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실시간 검색어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li> <li>○ 네이버·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는 정보·여론 왜곡의 창구이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에도, 막대한 트래픽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인하여 네이버·다음이 검색어 조작을 방기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로팅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 및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신유형의 불편 광고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언론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여 사전 예방하는 정책을 진행할 필요</li> <li>○ 광고를 허위로 클릭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광고 해킹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튜브가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선제적으로 노란딱지를 붙여서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li> <li>○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건수가 상당히 많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문제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음성 정보 수집 원칙, 삭제권 문제, 비식별화 문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 처리 방식을 검토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법령을 적용해서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워치(watch)를 통해 여과 없이 올라오는 성인용 콘텐츠를 점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li> <li>○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환경에 맞는 이용 약관 개정을 위한 추후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li>○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접속 차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방송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 영향력 확대나 시민의식 고양을 통해 근본적으로 허위·조작 정보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li> <li>○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 기관의 불일치 해소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TV조선이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가진 주식거래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하는 과태료 처분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 필요</li> <li>○ CJ ENM 프로듀스101 투표 결과가 조작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li> <li>○ 2018년 지역 MBC가 52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역방송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방송에</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가 금지된 방송국이 받는 협찬이 실질적으로 광고의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규제 필요</li> <li>○ 투표형 프로그램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필요</li> <li>○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정부·사업자 간 협의체 운영을 검토할 필요</li> <li>○ 동일 유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우선해서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자정 노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조사 면제 또는 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li> <li>○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범위 규정과 그 차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li> <li>○ 북한을 다룬 EBS 지식채널e의 스페셜 프로그램이 북한을 선전하는 용도를 갖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li> <li>○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게 간접비를 책정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파악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간접비 책정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간접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간접비 명목을 넣어야 하는 프로그램과 삭제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외주 제작사에 대하여 20~40%라는 과도한 간접비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 제작 실태를 파악하여 매출액·방송제작비 기준을 정한 후 0~5% 수준에서 간접비를 책정할 필요</li> <li>○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9월까지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는데 협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드라마 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li> <li>○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료의 100분의 10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일 수 있으므로, 수수료 징수 폐지를 조치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 필요</li> <li>○ 재외교민을 위한 실시간영상재생(OTT) 서비스의 강화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지상파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간광고 허용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방송사 작가나 외주제작사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점검 및 평가 반영 필요</li> <li>○ 개정된 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 방송평가점수표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 필요</li> <li>○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뉴스 편성에 개입한 KBS 보도국장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위반 여부 확인 및 조치 필요</li> <li>○ 서초동 집회의 참여 인원에 대한 MBC의 보도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할 필요</li> <li>○ 방송사의 드론 불법 촬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비책 마련 필요</li> <li>○ YTN의 앵커 선정 시 내부 편성규약 위반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점검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대화와 희열이 스페셜 이름을 붙여서 재방송이 본 방송처럼 방송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부적절한 재방송 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 교양 프로그램 철의 미래가 협찬사인 포스코의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는데 이는 광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제작비 기준에 맞지 않는 협찬을 받아서 2건의 주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보니하니, 최고의 요리비결이 삼성으로부터 상품의 노출을 조건으로 협찬을 받았다면 법령 위반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tbs 교통방송이 협찬을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크로스미디어랩 도입을 검토할 필요</li> <li>○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미디어랩 칸막이 규제를 풀어서, 허가 미디어랩의 통신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등 크로스미디어랩 허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살에 대한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의 생각 코너는 논평에 해당하고, 이는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협찬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시청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절</li> <li>○ 지상파 방송사에게 2012년 심야방송 허용, 2013년 약품·생수광고 허용, 2015년 광고 총량제 도입에 이어, 황금 주파수로 일컫는 700MHz 주파수 무상 할당까지 많은 혜택을 안겨줬음에도 방만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도입의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li> <li>○ 중소기업 방송 광고 제작 지원 사업은 지원받는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뿐 아니라 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더욱 확대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관련 결방 외압을 자행한 윤도한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방송법」 제4조제2항</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위반을 사유로 고발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사별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 보완 과정을 점검할 필요</li> <li>○ 국내 자본이 우리 드라마·영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li> <li>○ 케이블 방송 시청률 조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이 정기적으로 시청률 검증 등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단말기유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G 요금제를 이용할 때 5G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사가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일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5G 서비스 출시로 이동통신사 간 불법 보조금 문제가 극심해졌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조사 필요</li> <li>○ 이동통신사의 법 위반을 방지하고 건강한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의 엄격한 집행 필요</li> <li>○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li> <li>○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사기 판매 등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 관련 호객 행위 등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필요</li> <li>○ 불법 드론 공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파법」 제58조를 개정 후 교란기를 사용해서 무선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협조 필요</li> <li>○ 산하기관이 탈핵 운동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사 정책 기초 재설정 및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li> <li>○ 원전 부품 생산 기업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납품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 파악 필요</li> <li>○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돌연변이와 같은 허위정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인력 양성 필요</li> <li>○ 탈원전이 아니라 2100년까지 80년의 기간에 걸친 에너지 전환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국민 설득 노력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 보완 및 사고 수습·방사선 영향 평가·제염 문제 중심의 계획 수립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종 기술 규격, 기준 등을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방재 훈련의 표준 운영 절차(SOP)가 비상 소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대비 태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완 조치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태평양 주변에 원자력이 유출되는 경우의 손해 배상 체제인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협의를 위한 원자력안전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li> <li>○ 2015년 태풍으로 인한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유출과 같은 사고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부적절</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2019년 동안 연구개발 128개 과제에 1,440억 원을 투입했는데 규제·법령 개선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16%에 불과하므로 개선 필요</li> <li>○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 필요</li> </ul>
<감사조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 필요</li> </ul>
<안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 내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감사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조치 필요</li> <li>○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비상근 감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측 소송대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직 윤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소속기관 관련 계약 관계에 대하여 회피·제척 등을 규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윤리 강령 마련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 보고서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li> <li>○ 신한울 1호기의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에 대한 시험을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등 위증이 의심되므로 자료 제출 및 조사 필요</li> <li>○ 300만 개의 부품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 검사 항목이 100개 정도에 불과하므로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 정기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임시 저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제 사회의 신뢰성 손상의 문제를 잘 감안하면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통합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신속성·정확성·투명성·상호성 등을 반영해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인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운전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율운전 핵심 기술들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계를 허용한 후 원자로가 정지한 사건이 최근 10년 간 10건에 이르므로, 계획예방 정비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li> <li>○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합하지 못하고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 산하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의 한빛 4호기 보수 계획 설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 주 제어실의 CCTV 영상 데이터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정 마련 필요</li> <li>○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 점검 대상 확대 필요</li> <li>○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안전심의회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의결 연기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출력 측정 방식에 대하여 운영기술지침서상 반영 필요</li> <li>○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력 필요</li> <li>○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방사능 피폭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국가 방사능 방재를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력한 자료 요청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련 기기로서 제어봉위치 전송기(RSPT)와 ICI(노내계측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검증 없이 교체해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원전 해체와 관련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력 및 계획 마련 필요</li> <li>○ 원전 해체 전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또한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li> <li>○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증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 있는 이행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도 하에 원전의 공극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보완이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4호기의 공극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점검 필요</li> <li>○ 한빛 3·4호기 공극은 설계·감리기관으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한국전력·한국전력기술의 책임 역시 크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극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의 문제만큼 설계·감리과정에서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를 장착하도록 조속히 허가할 필요</li> <li>○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음에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논의함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 문제를 경제성보다 우선하여 고려할 필요</li> <li>○ 신월성 2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에 비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존재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으로 임계 허용 후에 노후 원전의 중지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기장연구로 건설허가가 났지만 계획했던 일정이 차질을 빚은 만큼 향후 있을 운영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li> <li>○ 원자로 불시 정지 사건으로 인하여 연구력 원자로 하나로를 정지하고 있는데, 외국 사례와 장기정지로 인한 피해, 특히 의료용 생산을 감안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0등급 정지를 지연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존재</li> </ul>
<p>&lt;방사선방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풍계리의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필요</li> <li>○ 북한 핵실험 지역 주변의 방사능 오염 실태와 주민 피폭 실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남북 공동 조사 제안 필요</li> <li>○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중심의 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오염수 방출 반대 의사 피력 필요</li> <li>○ 민간 사업장에서 일본 수입 자재의 방사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적인 검출 역량 제고 필요</li> <li>○ 일본에서 수입된 방사능 오염 고철이 공항·항만을 그대로 통과한 사례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감시기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검색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검사 비중을 높일 필요</li> <li>○ 방사선 검사 업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업무 통합이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술 분석 능력을 보완하고 고도화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주요 항공사가 사용하는 카리식스엠(CARI-6M) 프로그램이 우주방사선을 낮게 측정해서 승무원에게 불리하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 방식 개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주방사선 실측 과정에서 카리식스(CARI-6)나 카리식스엠(CARI-6M)과 같이 태양 활동의 변화에 따른 태양방사선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외할 필요</li> <li>○ 항공운송 산업 종사자의 피폭선량과 관련된 정보가 현행과 같이 5년만 저장되고 그친다면 국민의 원자력안전 보호는 물론 관련 연구 역시 요원할 것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li>○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신고사용자의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선작업 종사자 교육 등을 면제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 받지 않은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 원칙을 위반 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 등 이의 시정이 필요</li> <li>○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자들에 대한 준위별 안전장치 보급 의무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운반 종사자들의 보호 장치 구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교육 횟수가 아닌 업무 경력에 따라 안전 관리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경력이 많은 종사자들은 안전 인식 및 업무 태도 개선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할 필요</li> <li>○ 방사선 작업 종사자 다수가 서울, 부산으로 이동해 교육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방사선법」이 이미 수입한 모나자이트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li> <li>○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피폭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에서 일본산 유의 물질을 최대한 빠르게 반송할 필요</li> <li>○ 「생활방사선법」 제22조에 유의물질을 의무적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언제까지 반송하라는 구체적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li> <li>○ 라돈 아파트 이슈 역시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환경부는 여전히 방안만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환경부에 대응 마련을 촉구하거나, 법 체계를 정리해서 생활방사선을 전담 업무로 가져올 필요</li> <li>○ 라돈이 나오는 건축자재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조사할 수 없으므로 생산자나 수입자가 라돈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li> <li>○ 라돈 침대 등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수거 과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홍보 및 강제 조치 필요</li> <li>○ 수거 조치 대상인 가공 제품들이 생활과 밀접한 제품 위주이며, 심지어 아이들의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용 베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빠른 수거가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 검출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li> <li>○ 라돈 농도가 높은 곳이 원천적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 공간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철저하게 라돈을 관리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하철역사의 라돈 농도 관리 및 생활방사선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필품에 있는 라돈의 자가 측정이 번거로우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방문 측정 재개 필요</li> <li>○ 라돈이 검출된 생품이 12만 개 수거되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량을 모두 소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li> <li>○ 라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의 협조를 통해 라돈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li> <li>○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임시저장소 증설 기간 단축 필요</li> <li>○ 2024년이면 일부 습식 저장소가 포화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 촉진 필요</li> <li>○ 노동자의 피폭사건이 있었던 서울반도체가 신고기관이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신고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li> <li>○ 서울반도체 노동자의 피폭사건과 관련하여 검사 물량을 늘리는데 급급해 안전규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li> <li>○ 서울반도체가 보상기준에 용역 업체 작업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li> <li>○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방사능 물질 관리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li> <li>○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물레이션 중심의 분석을 통한 대응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인력을 파견하여 일본 본토에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정보 수집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등에 해외 인력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할 필요</li> <li>○ 일본 활어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만별 활어차 출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각 유관부처와 함께 전수 조사는 아니더라도 임의 조사라도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일본의 반발을 대비해서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철저 필요</li> <li>○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 필요</li> <li>○ 방폐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송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안 마련 필요</li> <li>○ 방사성 폐기물 이송 재개 문제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더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련 부처가 함께 협의하여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고 이송을 즉각 재개할 필요</li> <li>○ 「방사능방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정 병원 및 보건소, 원자력 사업장 등 특정 분야별 집중 훈련 대상으로부터 훈련 실시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방사선비상계획에서 한빛 원전이 있는 영광의 1인당 구호소 면적이 3.3m<sup>2</sup>인데, 다른 지역은 2.0m<sup>2</sup>에 불과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정 필요</li> <li>○ 방사선 분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이 나눠서 맡고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제 보완 등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li> <li>○ 소규모 수도 시설 15,000개 중 73개 시설의 리터당 우라늄 수치가 법정 기준을 상회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li> <li>○ 후쿠시마 오염 토양을 담은 자루 56개가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되었</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상청과 협조하여 자동 감시망을 설치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과정의 핵종 분석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조속히 이송할 필요</li> <li>○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과정의 핵종 분석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철저한 해명과 대책을 내놓을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방사성 폐기물 포대 유실 상황에 대응한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li> <li>○ 향후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위기 대응 훈련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조를 통해 방사능 해양 오염 대응 시뮬레이션 활용 계획을 세울 필요</li> <li>○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훈련시 해양오염 문제를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해양오염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li> <li>○ 개정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방사성 가공·수입 업체 등록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탓에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공 제품이 수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예 기간의 축소 조치를 실시할 필요</li> <li>○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직장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부산에만 있는 기본 교육장을 확대할 필요</li> <li>○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2015년과 달리 2018년에 냅스(NAPS)를 비전략물자로 판정한 이유는 코팩이 2018년에는 민감도가 낮은 냅스의 ‘교육용 교재’를 제출하여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수 조사를 통해 잘못 판정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시스템을 개선</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 감시기의 고장 내역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감시기 제품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심도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드론 공격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호 기준 마련 및 훈련 실시 필요</li> <li>○ 드론 및 기타 위험 요소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대책 검토 필요</li> <li>○ 북핵 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책임지면서 시나리오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고려할 필요</li> <li>○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드론 공격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드론방어 장비구축·전과법 개정·한수원 자체 긴급 조치권 부여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이버 보안 관련 분야의 심사 및 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 정책의 평가 및 보안성의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li> <li>○ 사이버 위협은 계속 늘어나고 지능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과 협력 공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li> <li>○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시민사회와 원전지역 주민, 미래세대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대부분 배제된 채 출범하여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라는 지적이 존재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회의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li> </ul>
<원전지역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빛 1호기 재가동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시행 필요</li> </ul>

## 라. 소속기관

### 1) 우정사업본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경영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정사업본부의 자체발주가 지난 5년 동안 174건, 1,216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예외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내용 재검토 및 발주 가이드라인 제작 필요</li> <li>○ 우정사업본부가 2011년부터 해외 유전펀드에 1,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약 33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그 경위 등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li> <li>○ 소포위탁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li> </ul>
<우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정사업본부가 총 파업 이후 우편사업 자체 경영 개선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2019년 7월 노사 합의에 대하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인력 증원에 대한 합의안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li> <li>○ 현재 집배원의 인력구조를 보면 개인사업자부터 공무원까지 7가지의 종류가 존재하여 복잡한 고용 형태 탓에 근로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li>○ 현재 인력 규모 안에서 특별소통기간 동안 과로사를 막으려면 우정사업본부가 물량 제한을 검토할 필요</li> <li>○ 택배 수가 늘어나고 집배원 수는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이륜차 적재 안전 기준을 규정할 필요</li> <li>○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습 폐지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li> <li>○ 올해 우정사업 현금 수지 적자가 1,96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에서 별정우체국의 심각한 적자를 해소하여야 하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중기 종합계획에 별정우체국 적자 해소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농어촌 주민의 알권리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우정사업본부가 농어촌 지역에 발송되는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우편요금 감액을 조정을 최소화 할 필요</li> <li>○ 우체국 집배원들의 사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순직자도 최근 2년 동안 11명이나 발생하였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li> <li>○ 집배원의 소포 배달 물량이 늘어난 반면에 위탁배달원의 물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연간 적정 배달 물량을 조정할 필요</li> <li>○ 우정사업본부의 전자우편 위탁사업에 대한 공개 입찰에서 지금까지 독점 운영한 업체가 전체 사업의 40%를 차지하는 등 독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독점 구조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전자우편 위탁사업을 16년간 장기 독점 업체와 대표가 같은 모 업체가 이번 입찰을 앞두고 대표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찰하였는데, 이는 입찰을 교란한 부정당 행위로 보이므로 동일 사례 예방 조치 필요</li> </ul>
<예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2019년 우체국 휴면예금 규모가 810억 원이고 현재 잔액 규모가 376억 원인데, 고객들이 휴면예금 계좌를 찾아가기 편하도록 우정사업본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며,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li> <li>○ 우정사업본부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직접 설립 또는 대주주 참여 등의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li> </ul>
<보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정사업본부가 201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실시한 금융 감사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체국보험에 대한 위험(risk) 대응력을 높이고, 위험 관리자를 비롯한 주요 직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우정사업본부 보험 사업단 주요 직위에 대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하</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여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2) 국립중앙과학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경영기획>	○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

## 마.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1) 한국연구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노벨과학상 종합분석보고서는 홍보에 치우친 측면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처방 필요</li> <li>○ 한국연구재단이 교양기초 교육에 대한 학술분류 체계 개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li> </ul>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부문의 생명공학 및 생물자원 관련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한국연구재단 내에 농학단을 설치할 필요</li> <li>○ 향후 20~30년에 걸쳐 155만 톤의 폐폐닐 발생이 추정되므로, 재활용·유해물질정해 같은 태양광 폐폐닐 처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li> </ul>
<과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사업 과제 종료 이후 연구 단절률이 높는데, 연구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장기간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만 작성 성과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재도약연구 사업 확대처럼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와 지원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amp;D)의 전산 시스템이 노후하여 다운이 된 적이 있으므로 시스템 개선 필요</li> <li>○ 과학기술 R&amp;D가 상용화(commercialization) 및 이익(profit)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li> <li>○ 최근 3년간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 사업과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의 선정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사업 계획·정책 연구를 통하여 정책을 발굴할 필요</li> </ul>
<연구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부정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환수 대책 마련 필요</li> <li>○ 연구비 부정 집행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43억 원에 가까운 연구비 부정 사용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구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므로,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li> <li>○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15명 중에 13명이 교수여서 온정주의에 따른 봐주기 심사가 우려되므로 부적절</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선정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li> <li>○ 교육부의 미성년 자녀를 둔 교수 대상 연구논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사업에서 저자 표시가 의심스러운 논문이 24건이 나왔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 및 조치 필요</li> <li>○ 미성년 공저자, 제1저자 등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li> <li>○ 부실학회 공시 시스템 구축 필요</li> <li>○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조치평가단이 연구자의 불법행위를 부주의나 실수로 용인해주는 행태 개선 필요</li> <li>○ 자격 미달의 논문 공동저자의 연구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까지 작성된 논문 전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필요</li> <li>○ 교육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li> </ul>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부터 1조 1,336억 원이 지원된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감사 및 평가 필요</li> <li>○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으로 선정되어 170억 원 정도 투입되었다가 실패한 신라젠 펙사백,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대하여 조사 실시, 연구지원금 회수 및 연구책임자 고발 필요</li> <li>○ 감사 능력 증진을 위한 조직 개편 필요</li> <li>○ 감사원 핫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건비 유용이나 부당 집행의 제보에 대하여 감사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li> <li>○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매니저(PM)가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제보한 사람에 대하여 뒷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적절</li> </ul>

## 2)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발전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연구개발 윤리 기준을 만들 필요</li> </ul>

## 3) 한국과학창의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동일 업체와 두 번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업무규칙을 우회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절</li> <li>○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홍보 내용 중에 임직원 대출금리 인하와 정수기·공기청정기 기부 사실은 일반 국민 관점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절</li> <li>○ 한국과학창의재단이 YTN 사이언스 채널을 운영하면서 순환방송 편성 비율 목표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있으므로, 본방송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li> <li>○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제 선정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여부나 실적 기재 기준 등에 대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과제 신청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li> </ul>

## 4) 한국과학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통합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이 다른 과학기술원·대학·출연연구소·민간연구소·기업과 협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li> <li>○ 한국과학영재학교 운영 목적 및 지침 정비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대안 마련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반감사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위원회 구성이 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li> <li>○ 과학기술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원 통합이사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li> <li>○ 각 학과와 연구실의 통제되지 않는 서버에 대해서도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 혁신을 이뤄내기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선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할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처와 연구기획센터가 기획한 KAIST가 던지는 궁극의 질문 프로그램이 우수하므로 지속적인 활용 필요</li> <li>○ 군사적인 인공지능(AI) 사업이 교내 인공지능 윤리현장에 어긋나고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지난 3년 동안 농업 부문 연구 실적이 저조하므로, 농업생명공학과 농업생물자원 관련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농업 부문 연구를 확대할 필요</li> </ul>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가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할 때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 필요</li> <li>○ 지도교수의 친족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li> <li>○ 김박사넷의 교수 평가 정보에 인신 공격이나 인권 유린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li> <li>○ 행정직 책임급 채용자격 기준을 국가기관·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가진 자로 국한하여 민간 부문의 역량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준 개선 검토 필요</li> <li>○ 위촉연구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구체화시킬 필요</li> <li>○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처럼 사회 통념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언행을 한 구성원을 제재할 수 있는 윤리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li> </ul>
<비정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직원 498명에 대하여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 필요</li> <li>○ 2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한 고용 안정 약속을 이행할 필요</li> <li>○ 향후 추진되는 2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편법적 방법이 있다는 지적이 없도록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필요</li> <li>○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특성에 비추어 사업 관리와 인력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li> <li>○ 현재 연구과제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동일·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 간의 임금 및 복지 부문에 격차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본급 급여 체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론 인력 풀링제 도입 및 운영이 필요</li> </ul>

####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에 6억 원의 투자 손실을 보았으므로 자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li> </ul>

#### 6)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행태 개선 필요</li> <li>○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 개발 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수요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구축 필요</li> </ul>

### 7)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목적 및 지침 정비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반감사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반감사 처분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향후 감사 집행에 있어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해당 사안을 대할 필요</li> </ul>

### 8) 광주과학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박사넷의 교수 평가 정보에 인신 공격이나 인권 유린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li> <l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 혁신을 이뤄내기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선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li> <li>○ 기술지주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익 제고 방안 마련 필요</li> <li>○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출산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실험조교 부당해고 신청에 대하여 실험조교는 상시지속 업무이므로, 행정심판 제기를 포기하고 실험조교를 원직·복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li> </ul>

### 9) 울산과학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대응하였으므로 부적절</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박사넷의 교수 평가 정보에 인신 공격이나 인권 유린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li> <l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 혁신을 이뤄내기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선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li> <li>○ 기술지주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익 제고 방안 마련 필요</li> <li>○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출산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lt;일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박사넷의 교수 평가 정보에 인신 공격이나 인권 유린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li> <li>○ 군 경력을 직무 분야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li> <l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 혁신을 이뤄내기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선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li> <li>○ 기술지주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익 제고 방안 마련 필요</li> <li>○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출산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 11) 기초과학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단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2012년의 초기 기초 연구단 운영계획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에 5개의 연구단을 설치·운영할 필요</li> <li>○ 내부 임용규칙에 위배되는 불공정 채용 논란 존재</li> <li>○ 언론에서 보도된 비도덕적 범법행위에 대하여 전임 기초과학연구원장이 행정 착오를 주장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은 부적절</li> <li>○ 대졸 신입 행정직 평균 연봉에 비해 석사·박사 연구원의 연봉이 적고 연구원들의 타 기관 이직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수 체계 개선 필요</li> <li>○ 2017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예방지침에 없는 내부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인 연구원이 울산과학기술원을 자퇴하였으므로 기초과학연구원의 사과 필요</li> <li>○ 본원 12개 연구단과 지역별 18개 연구단에 관해 정보 보안 통제 대책을 구축할 필요</li> <li>○ 중이온가속기사업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부서장 평가를 낮게 받은 것이 부당하므로 재검토 필요</li> <li>○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임무가 상이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로 있어서 산업수학 수행에 제약이 많으므로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 등 협력 연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li> </ul>
<중이온가속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이온가속기 사업의 완공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1/4과장 공명기(QWR), 1/2과장 공명기(HWR) 등의 설치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부실·줄속 공사 우려 존재</li> <li>○ 구축 이후 세계 최초로 걸맞은 성능을 자랑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속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초과학연구원이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목표 성능의 구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설계할 필요</li> </ul>

### 12)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가 상이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산업 수학 연구에 제약이 많으므로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 등 협력 연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li> </ul>

### 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소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항공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각별한 관심 필요</li> <li>○ 성과지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나, 특허출원의 성장세가 더디고 대덕특구의 침체가 눈에 띄게 드러나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회복 노력 필요</li> <li>○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특구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위탁 관리하는데, 이러한 이중 관리 체계로 인하여 혼선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도권을 갖고 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강소특구가 대덕의 기존 특구와 지원이 겹친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ul>

###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창의성 등 정성적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도 보완 필요</li> </ul>

15)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감사 조치 필요</li> <li>○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여 거동 불편자나 재해약자를 대상으로 약품 등을 미리 배포하는 정책을 의논할 필요</li> <li>○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 원전 반경 범위, 방사능 비상 상황 지역에 대한 약품 수요예측이 전제되어야 비상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비상약품에 대한 지방 분산 배치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검토 필요</li> <li>○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핵 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피폭 관련 전수조사 필요</li> <li>○ 북한이탈주민의 피폭 조사의 결과가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이를 널리 알려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할 필요</li> </ul>

16) 국립광주과학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광주과학관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 심사표에 대상자의 가점을 미리 기입한 것은 인사 비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절</li> </ul>

17) 국립부산과학관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부산과학관장의 지인 11명이 가족과학캠프를 진행하는 캠프관을 독점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li> <li>○ 현대자동차가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에서 전기자동차를 전시할 때 국립부산과학관이 대여료를 모두 부담한 것이 부적절하므로 조사 필요</li> </ul>

### 18) 한국나노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나노기술원장이 현직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li> <li>○ 한국나노기술원의 특허 출원 건수 등의 성과 개선 필요</li> </ul>

### 19)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사업화 실적, 창업지원, 일자리창출의 역할에 비해 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li> <li>○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 사업은 3년 한시 사업으로 내년에 종료되므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지속적인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을 위하여 후속 사업을 기획할 필요</li> <li>○ 실험실 창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원스탑 실험실 창업 사전 기획 사업 등이 필요하므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창업 전담 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li> </ul>

### 20)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당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기획정책실장의 딸이 해당 센터에서 주관하는 연구지원사업의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부적절</li> </ul>

### 2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임무가 상이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로 있어서 산업수학 수행에 제약이 많으므로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 등</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협력 연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요 직위나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관 규정을 유예기간을 두고서라도 조속히 시행할 필요</li> <li>○ 부실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내부의 이기심을 서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li> <li>○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른 전담 인력이 미비한 기관이 다수이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신진 석박사 채용 사업의 월급 상납 문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력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HTTPS 관련 보안 조치를 잘 정리한 것은 바람직</li> </ul>
<p>&lt;미래전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융합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칭 기술위원회 신설 같은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연(연)의 통폐합·단일법인화 등을 검토할 필요</li> <li>○ 출연(연) 분원의 과도한 설치로 인하여 특구의 기능이 분산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역 조직 평가를 거쳐서 통폐합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li> <li>○ 기초과학연구원과 과기정통부의 직할 연구기관이나 출연(연) 간에 연구개발 분야의 중복이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초과학연구원의 기능을 출연(연)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li> <li>○ 출연(연)이 향후 닦칠 수 있는 기술 종속의 위험(risk)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이 고유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장기 계획을 정립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도로 출연(연)에서 수요기업과 중소기업을 잘 연결하여, 제품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의 요구수준을 잘 전달하고 이러한 요구에 중소기업 제품이 잘 부응해서, 해당 제품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된 5대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산업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실안전법, 연구개발특구법)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출연(연)의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출연(연) 예산의 출연금 비중이 1%p 인상에 그치고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예산의 출연금 비중을 예산의 50% 이상으로 높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li> <li>○ 국가 연구개발(R&amp;D) 공고 시점을 다양화하고, 협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노력 필요</li> <li>○ 다년도 연구 시에는 승인 없이도 연구비를 선집행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경직성 해소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일본의 조정금 연구비 지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li> <li>○ 출연(연)의 인건비 총당이나 기관별 R&amp;R(Role and Responsibility) 재정립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재원 마련을 요구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에서 정립된 기관별 R&amp;R(Role and Responsibility)을 어떻게 국가 연구개발(R&amp;D) 전략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필요</li> <li>○ 출연(연) 기관별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재정 전략에 따라 안정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서 연구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상용화(commercialization)</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및 이익(profit) 창출 등 성과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를 설득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할 필요</li> <li>○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의 경우에 기존 수행 업무 외 추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출연(연) 지역조직 연구원들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충분한 지원과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조직에 대한 추가 인력 지원이 없는 경우에 활동 지시를 철회하거나, 활동을 위한 출연금 배정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치의과학 관련 출연(연) 설립을 검토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내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R&amp;D) 및 첨단기기, 재료 개발의 전담 조직으로서 ‘치의학융합연구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스마트팜 같은 신기술을 포함한 농어업 연구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필요</li> </ul>
<인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출연(연)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 이후 출연(연)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연구직 채용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노력할 필요</li> <li>○ 노벨상 수상자 다수의 연령이 60대 이후인 것에 비추어 출연(연) 우수 인력의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65세 정년 환원,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출연(연)의 30대 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출연(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연령대의 연구원들이 필요하므로, 국가과학기</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술연구회가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 정년이 61세로 낮아진 상태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임금만 삭감된 셈이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li> <li>○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연구개발직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li> <li>○ 국과과학기술연구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li> <li>○ 출연(연) 파견노동자의 전환률이 현재 저조한 상황이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대상 근로자의 전환률을 높이는 등 정책 취지에 맞게 보완 조치를 마련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노사협의기구 구성과 운영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많으므로, 대다수 용역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자 대표 선정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모든 출연(연)이 노사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다수의 출연(연)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3.2%를 하회하므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연구 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 효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지원 인력 확보 대책을 고민할 필요</li> <li>○ 여성 과학기술인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소규모 출연(연) 대상 어린이집 설치,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중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출연(연) 차원의 참가제한리스트 또는 부실학회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li> <li>○ 출연(연)이 부실학회 사태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환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li> <li>○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철저한 출장비 회수 및 징계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중단된 연구 과제에 대하여 참여 기회 제한이나 연구비 회수와 같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관리 수단을 사용할 필요</li> </ul>
<성과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의 해외 특허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li> <li>○ 25개 출연(연)이 보유 중인 특허 가운데 미활용 특허가 65.3%이고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또한 10% 이상인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미활용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연구행정선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행정간소화 추진책들이 실제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할 필요</li> <li>○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4차 산업혁명과 융합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개선 노력 필요</li> <li>○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하에서 행정보조요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특정 팀이 아닌 기관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ul>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자체감사 일수를 10일로 확대하고 감사에 대한 확인서·처분요구서·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부서 경력자를 협동 감사인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시 협동 감사인이 감사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원소속기관과 활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동감사인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무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노력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합 감사 제도와 감사 전문직화에 관하여 발의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통합 감사 제도는 출연(연)의 기존 감사의 전문성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부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므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식품연구원장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 중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를 해임한 것은 부적절</li> </ul>

## 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증명서 발급을 날조한 의혹이 있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내규에 따른 징계 및 고발 조치 필요</li> <li>○ 과학기술계가 유력 인사나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노력할 필요</li> <li>○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필요</li> </ul>

## 2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KSTAR)가 플라즈마 온도 1억 도를 달성했음에도,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중국과 비교하여 정부의 핵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지적 존재</li> </ul>

#### 2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를 준공할 때 방충·방서를 고려하지 않아 인수 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조치 필요</li> </ul>

#### 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 권고문을 받고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연구센터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서 문제를 야기했으므로 보완 노력 필요</li> <l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R&amp;D 연구자 연구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때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필요</li> </ul>

#### 2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사업계획서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지 않아서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적절</li> </ul>
<위성운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시행계획·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li> <li>○ 위성통합운영시스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정보원과의 양도 관련 사안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놓을 필요</li>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차기 통신 위성 국산화 차원에서 천리안 1호의 대체 위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li> </ul>
<달탐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달 탐사 궤도선 발사가 재차 지연되어 2022년 7월로 연기된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므로 부적절</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기술 검토 의견을 보이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설득할 필요</li> <li>○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향후 원장·단장의 은폐행위가 드러난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원장을 비롯한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li> </ul>
<발사체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발사체 경쟁 본격화의 추세에 비추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5년까지 3단형 발사체에 주력하는 것은 경제성과 전략성이 떨어지므로 부적절</li>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저비용 소형 발사체 개발과 초소형·소형 위성 발사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li>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li> </ul>
<항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 정부기관의 통합된 재난현장 상황 종합 분석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적 예외 법적기준을 제공하는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할 필요</li> </ul>

## 27)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기업 콜마비엔에이치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주로서 발언권 행사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필요</li> <li>○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빈발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초고온 가스는 싼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추가되는 경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많은 예산을 반영할 필요</li> <li>○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민간 투자를 받아 연구개발(R&amp;D)을 활성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내 구성원과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
<방사성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준비할 필요</li> <li>○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로부터 4세대 원자로 노형에 대한 기술 확보와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민의 선택권 존중 차원에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투자 확대 필요</li> <li>○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의 핵종 분석 오류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상이하므로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li> <li>○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을 발생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li> <li>○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경수로/중수로 합계 저장물이 90%를 초과했고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임시저장소가 완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이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31년이면 대부분 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 탈원전을 의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li> </ul>

## 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필요</li> <li>○ 국가 예산으로 지어진 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경우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모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평가 기준이나 배점 등을 공개할 필요</li> <li>○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이 불투명한 평가 기준에 따라 위탁 경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위탁경영 기업들을 선정할 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5G 네트워크 보안 관련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li> <li>○ 버스에서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가 작동이 안 되어 5G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계획 마련 필요</li> <li>○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필요</li> <li>○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SW) 또는 알파고에 한정된 개념으로 알려져 하드웨어(HW)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공지능(AI)과 하드웨어(HW)의 동반 성장 방안을 부각시킬 필요</li> <li>○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국가 거대 연구개발(R&amp;D)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li> </ul>

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 의무 수행자가 아니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를 징계 처분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li> <li>○ 싱크홀 관련 연구가 기술 개발까지 성공했음에도 기술 이전에 실패하였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 성과를 사장된 채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존재</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생활안전·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amp;D)의 경우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ul>

### 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디젤 노후차량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소철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건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므로 조치 필요</li> </ul>

### 32) 한국식품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식품연구원의 구 사옥 매각 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이 늘어나는 것을 도와주고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지지 않은 것은 부적절</li> <li>○ 퇴임연구원 장비 무단 유출 건 감사와 관련하여, 반납을 이유로 감사에 보고하지 않고 감사부장이 불문 처리한 것에 대하여 한국식품연구원의 추가 감사 필요</li> <li>○ 한국식품연구원이 생활안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만큼은 현장의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ul>

### 33)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 자급률을 높이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의 요리법 또는 공정의 표준화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li> </ul>

### 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 지열 지진의 원인에 대하여 정부 조사단의 발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li> <li>○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능 물질의 동해안 유입에 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위험 분석 및 오염 측정 필요</li> <li>○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협력해서 지진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신속하게 관측할 필요</li> <li>○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북한 핵실험을 원인으로 하는 지진·지하수 오염·해양 오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 지질조사를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할 필요</li> <li>○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백두산 화산 분화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li> </ul>

### 35) 한국기계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기계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필요</li> </ul>

### 36)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설계,</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인력 확보,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재료연구소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를 상용화 하여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과 같은 왜곡된 사실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li> <li>○ 태양광 폐패널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 필요</li> <li>○ 태양광 폐패널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을 개발·상용화할 필요</li> </ul>

### 38) 한국화학연구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화학연구원이 국가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재원 정책 자료집을 참조하여 화학소재 산업의 육성 방안을 고민할 필요</li> </ul>

### 3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주파수인식(RFID)/스마트센싱 확산사업’ 관련 담당자 부정사용·횡령 사건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심 준비를 완벽히 해서 국민 혈세 돌려받고,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명확히 하여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li> <li>○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식당 운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최소 50% 이상 지역 농산품·물품을 사용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체 징계요령의 징계 소멸시효가 2년인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의 기간인 3년에 비하여 짧으므로 조정 필요</li> </ul>
<소프트웨어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소프트웨어활성화지원 사업에서 개방형 운영 체제(OS) 개발·보급 과제와 산업별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과제의 최근 3년 사업화 실적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ul>
<인공지능(AI)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같은 핵심 분야의 신규 인력 양성 규모를 늘릴 필요</li> <li>○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이 마케팅 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점검 필요</li> <li>○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에서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li> <li>○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IoT) 기술 지원 센터의 기술 지원 실적은 많지만 국제 표준 기반 시험 인증 서비스가 38건뿐이므로 부적절</li> <li>○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노력할 필요</li> <li>○ ‘닥터 앤서’가 시범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허가, 규제, 예산 문제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가상현실·증강현실 콘텐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가상현실(VR)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확보와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대규모 과제를 선도할 필요</li> <li>○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역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제작거점센터’ 제도의 지원기간을 늘리는 한편,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센터별 자력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가상현실체험관을 짓는데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무려 20억</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원의 국비를 투입했고 지방비 또한 8억 원이 들었으므로,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묻고 가상현실체험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향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 기업 맞춤형 역량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진행할 필요</li> </ul>
<글로벌정보통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 인력을 교육하거나 파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li> </ul>

#### 40) 한국인터넷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라는 명칭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li> <li>○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체 예산 중 58.2%를 차지하는 출연금 사업 집행률이 가장 높은 97.17%, 자체 사업은 집행률이 86.72%로, 정산후 불용액을 반납해야 하는 출연금 사업의 집행률은 높고 이월이 가능한 자체사업의 집행률은 낮다는 지적 존재</li> <li>○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단기적으로 지역 물품 및 구매업체 비중을 절반 이상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도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이 있더라도 바뀌지 않도록 내부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중소기업 피해 완화를 위해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협회·금감위 등과 논의하여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필요</li> <li>○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등의 정보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 기관·보험 협회와 의논하여 사이버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li> <li>○ 공공기관에서 보안 적합성 검사 없이 중국산 화웨이 컴퓨터를 도입했으므로 보안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11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직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파트에 1명을 선발하면서 단 1명의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li> </ul>
<사이버침해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오스크, 산업용 제어시스템 등 기업용 제품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피해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민간뿐 아니라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피싱 사이트가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위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li> <li>○ 홈페이지 변조 해킹에 대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취약점에 대해 미리 조사하여 파악하고, 기술을 개선하는 등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를 해서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필요</li> <li>○ 사물인터넷(IoT) 제품,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보안위협 분석 및 보호대책 마련을 통한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이용기반 조성이 시급하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력 필요</li> <li>○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개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 수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므로, 네트워크 개별화를 고려하여 기기 자체의 보안 강화보다 네트워크 분야의 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할 필요</li> <li>○ 공개된 취약점 포함 여부 점검 범위에 인공지능 스피커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음성 명령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할 필요</li> <li>○ 2014년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시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관련 사업은 타 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방송통신 국제협력 출연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남아있어 조정이 필요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여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li> <li>○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강제성 있는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도록</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입법 등의 방안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성 애플리케이션과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li> <li>○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구글 홈,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아마존 에코·샤오미 인공지능(AI)에 대하여 보안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무선 백도어 공격은 인터넷 연결 없이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핵심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작동되어서 인터넷 통로를 지키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 소위 방화벽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감지·방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서 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도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 필요</li> <li>○ 40개가 넘는 국책 연구기관 전부가 무선 스파이칩에 의해 언제 어떤 정보가 유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관련 보안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보안 위협에 대응할 필요</li> <li>○ 북한 소행의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사이버침해 대응과 분석, 정보공유 등 기능의 범위를 고도화 할 필요</li> <li>○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사고 분석뿐 아니라 공격 근원지, 공격 주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재정비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부와 협력할 필요</li> </ul>
<개인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적극적인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불법 유통 탐지와 삭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li> <li>○ 구글에게 네이버 계정 판매 게시글을 검색 결과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할 필요</li> <li>○ 불법 계정 판매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방지 대책 마련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전화 발신번호 변작 검사를 실시할 때 별정통신사들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감사원증을 꼭 패용하고 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며 자세하게 고지할 필요</li> <li>○ 별정통신사가 음성전화 발신번호 변작 검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li> <li>○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필요</li> <li>○ 스카이에듀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장기 미사용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미사용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제 조치를 검토할 필요</li> <li>○ 중국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가 빈번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위조 여권 등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에 건의하여 외교부 등 범부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다크 웹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필요</li> <li>○ 싸이월드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필요</li> </ul>
<정보보호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의무화되어 도입되면 기업들의 저항·반발이나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 검토 필요</li> <li>○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른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대학의 보안 취약점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많은 대학이 여전히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li> <li>○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이 대학 학사 시스템에만 적용되고, 해킹에 가장 취약한 교</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무행정·연구·수업 관련 시스템은 오히려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지적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정보보호 현장의 인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을 교육하거나 파견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정보통신기술(ICT) 보유현황에 맞는 차등화 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사이버 안전망 구축 수준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li> <li>○ 지역 정보보호 기업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보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영세 중소기업의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지원할 지역 정보보호 기업 육성센터를 건립할 필요</li> <li>○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과 제도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 인증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li>○ 서울특별시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이 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li> </ul>
<인터넷서비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티브X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통하여 국내 인터넷 환경을 국제 표준에 맞춰 신속히 개선시킬 필요</li> <li>○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가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과기정통부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준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li> <li>○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순 심의기구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격상하고,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주소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li> <li>○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이 포털 검색 시 한글도메인이 우선으로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적극적으로 나설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샵메일이 시간이 갈수록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연착륙 계획을 마련할 필요</li> <li>○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우려가 많으므로, 서비스를 중계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정보 보안관련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li> <li>○ 와이파이 위치 기반 서비스(LBSP)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기준이 미비하므로 제도화 필요</li> </ul>

4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단기적으로는 최소 50% 이상의 지역 농산품과 물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인사이동이나 업무변경이 바뀌지 않도록 내부규정 개정 등 방향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면 심사를 수행한 이사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li>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5G 전자파의 유해성 관련 소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홍보할 필요</li>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무선국 검사수수료 수익으로 인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므로 조정 방안 마련 필요</li> <li>○ 현재 성인과 아동 전자파 안전 기준이 같은데 일각에서 이것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검토 필요</li>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기금 통합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복·유사 사업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사업관리 부서를 개편할 필요</li> </ul>
<전파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5G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검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무선국 검사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무선국 검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5G 기지국 준공 검사에 속도를 낼 수 가 없다고 보므로, 무선국 검사 기관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li> <li>○ 무선국 허가검사 제도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li> <li>○ 향후 도입 예정인 5G 송신기의 주파수 28GHz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다른 측정 전문 기관이 협력하여 5G 28GHz 전자파에 대한 측정법을 개발할 필요</li> <l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과기정통부가 무선국 준공 신고가 들어 오면 45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하고, 45일 이내에 못해 주면 검사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li> </ul>

#### 42)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lt;일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전 직원이 폭력과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파견·용역 직원의 정규직 전환대상 선정이 부적절하고, 한시적으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특혜의 소지 존재</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이 실시한 우호적·협조적인 부서와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문용식 원장의 소위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li> <li>○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원장직 공모 실시 이전에 내락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 존재</li> <li>○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서울 출장이 빈번하고 출장 기간에 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적절</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정보화백서에 오기·오류가 존재하고 공공 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및 개선 필요</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에 2017년부터 90일 미만의 연구 용역 과제가 15건 존재하는데 타 기관보다 기간이 짧은 과제가 많은 것이므로 계획에 대한 점검 필요</li> </ul>
<지능형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을 참가시킨 것은 부적절</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 시 정량 평가 비중을 낮게 설정한 것은 기술 수준이 낮은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부적절하므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li> <li>○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입찰 과정에 대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재조사 실시 필요</li> <li>○ 중소 통신공사업자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참여 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점검 필요</li> <li>○ 통신 품질 평가의 정확성이 낮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li> </ul>
<정보통신기술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치매돌봄 로봇 서비스 실증사업에 9.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확대를 고려할 필요</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 빌리지 선정 과정에서 합천군의 이견이 있었으므로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li> </ul>
<디지털격차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절반을 해고했는데 이것이 원장의 정규직화 계획과 어긋난다는 우려 존재</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의 통신중계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현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손말이음센터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통신중계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키오스크 등의 정보접근성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정보화 교육이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재교육을 검토할 필요</li> <li>○ 노인이나 휠체어 이용자가 키오스크·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지나치게 고가이므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보조기기의 편의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li> <li>○ 노인층 및 장애 유형별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키오스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노년층의 역 창구 발권 비율과 입석 발권 비율이 젊은 세대보다 높으므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li> <li>○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li> <li>○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집합교육에만 치우쳐져 있어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 등을 위한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필요</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예산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이 인공지능(AI)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보급,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li> <li>○ 웹 접근성 실태 조사 점수가 낮은 교육기관과 50개의 공사 등에 대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한 점검 필요</li> <li>○ 웹 접근성이 좋은 민간 기업에 대하여 인증이나 포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li> </ul>
<디지털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정립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확산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윤리 교육이 초·중고 학생에 집중되어 있는데 성인의 사이버 폭력 경험 비율이 학생보다 더 높으므로 성</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인 대상의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윤리 교육의 현장 수요에 비하여 지원 실정이 미흡하므로 수혜율 상승을 위해서 노력 필요</li> </ul>
<디지털과 의존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세의 영·유아에 대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li> <li>○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므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담 실적을 제고할 필요</li> <li>○ 콘텐츠 이용 형태·중독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스마트 쉽 센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전문 상담인력 증가에 힘쓰고 부모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li> <li>○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 영역에서도 적극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li> </ul>

### 4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경영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과 차등적인 내부규정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고 향후 계정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li> <l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신규채용 절차 오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지역 생산품 사용 및 지역 소재업체 이용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유통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거래소 개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ul>
<데이터바우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 대비 대폭 증액된 데이터 바우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공개 모집 결과가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li> <l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쿼터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li> </ul>
<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 인력 교육 및 파견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li> <li>○ 빅데이터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민간 데이터의 경우 표준화 개념 없이 기업 간 독자적으로 다뤄져 활용이 더욱 곤란하므로, 민간데이터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하여 책임기관 ‘데이터 표준원’ 설치나 데이터 표준화 관리와 같은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필요</li> <li>○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DB-Stars 사업)이 인기가 있음에도 예산이 늘지 않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li> </ul>

#### 4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광고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일 수 있으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개선 노력 필요</li> <li>○ 정부광고는 해당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방송통신 분야), 언론진흥재단(신문인쇄 분야)이 각각 담당하는 것이 「정부광고법」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므로 검토 필요</li> <li>○ 새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크로스미디어랩 제도 도입의 추진을 지속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로스미디어랩 제도 도입 시 공영방송에 혜택 집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익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 등 신중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li> <l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으로 인하여 인터넷 광고나 정부 광고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개선 필요</li> <li>○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자회사로 보내는 방안을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원만하게 타결할 필요</li> <l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여성 임원이 없고 팀장도 적은 편이어서 양성 평등의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가정이 양립하고 가정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 필요</li> <li>○ 광고 방법·성향에 관하여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 제작, 방송광고 표준화 작업 등을 시도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이 광고 영업을 시작하면 상당한 라디오 광고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검토 필요</li> <li>○ 연수원의 이용 행태 변화나 수요 감소에 맞는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li> <li>○ 광고 운행 불일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자체감사 결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ul>
<광고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한 편이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방 교육을 확대하고 상설화 할 필요</li> <li>○ 공익광고가 혐오·허위조작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광고주로서 언론재단·유튜브 등에 대하여 협약 체결 또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li> <li>○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력 필요</li> <li>○ 광고별 선호도 같은 정량 지표를 다음 연도 공익광고 제작 과정에 반영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광고 주제가 일변도적이고 훈계·질책 위주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주제를 다양화하여 일본 경제 도발 같은 시의성 있는 현안을 채택할 필요</li> <li>○ 농어촌 관련 공익광고 제작 필요</li> <li>○ 공익광고가 포털, 유튜브에 게재되는 것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건의 필요</li> <li>○ 방송사의 공익광고 저시급대 송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광고의 온라인 송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ul>
<중소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이 방송발전기금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활로 개척 필요</li> <l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방송 광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업계 대표가 제작비의 집행을 검증하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므로 부적절</li> <li>○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연중 상시에 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제도 개선 검토 필요</li> <l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li> <l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이 규모가 크거나 외국 자본이 들어온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 필요</li> <li>○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과정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고민할 필요</li> <l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광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회사보다</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정말 텔레비전 광고가 필요한데 여력이 없는 건강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소재 제작 지원 사업 과정에서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개정된 규정의 적용·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li> </ul>
<광고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의 광고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영업 능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ul>

#### 45) 시청자미디어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원하기 위해 공모하고 사회적 기업 홍보 영상의 제작 지원 기업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절</li> <li>○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어린이 실시간영상재생(OTT) 콘텐츠의 프리롤(pre-roll) 광고 앞에 어린이 시청 안내 광고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ul>

#### 4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한국의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다른 전문기관의 협업 촉진 필요</li> <l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li> </ul>

#### 4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이버 보안 특별 점검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점검 계획서 제출 필요</li> <li>○ 물리적 방호(드론 등)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선도적인 연구개발·규제 계획 설계 필요</li> </ul>

#### 4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법률 검토 용역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미활용과 수의계약 금액 한도 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li> <li>○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비상근 감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측 소송대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직 윤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검토 필요</li> <li>○ 생활 방사능 물질로서 북한 풍계리의 방사능 물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교육 확대 필요</li> <li>○ 국가 방사선 안전교육, 업종별 교육 외에 교육생 수준별 특성과 선호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li> <li>○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국가 방사선 안전 교육, 업종별 교육 외에 교육생 수준별 특성과 선호에 맞춘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필요</li> <li>○ 산하 위원회의 구성이 탈핵 운동가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신중한 충원 필요</li> <li>○ 2015년 4월에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을 받고 2019년 5월에 발견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li> <li>○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중국 정부에게 중국 원전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할 필요</li> <li>○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교육 횟수가 아닌 업무 경력에 따라 안전</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개선 노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이 많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안전 인식 및 업무 태도 개선 위주로 교육받는 것이 안전 관리 강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교육 체계 개선 필요</li> <li>○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교육 과정에서 예산·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형식적인 연1회 교육보다 내실과 전문성·실효성을 갖춘 2년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li> </ul>

49) 한국수력원자력(주)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력원자력의 순환보직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인력 양성 필요</li> <li>○ 원전 운영은 안전이 우선시되는 작업이므로, 일선 관계자 배치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을 우선한 인사를 실시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내 외주 감소 노력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 직원보다 위험의 강도가 높고 피폭량이 많은 외주 직원에게 위험 수당 등을 활용해서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 업무 외주화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 노동자와 신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외주 협력 업체 직원이 안전 사고나 방사선 피폭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li> <li>○ 월성 원전의 기술 규격이나 규정이 오래되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개선 노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발전소 핵심인력 가운데 관련 노형 면허 보유율이 51%에 불과하므로 요건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li> <li>○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음에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검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부적절</li> <li>○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의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경제성이 부족한 태양광 위주이므로 부적절</li> <li>○ 원전 건설 관련 업체가 원천 해체 산업을 이어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검토 필요</li> <li>○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속한 결정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이 빠른 시일 내로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를 장착할 필요</li> <li>○ 월성 3호기 핵심 설비인 습분분리기의 점검 주기가 10년으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검사 기준을 개선·확립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정 중소기업의 워터게트 제염기를 간부들에게 소개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절</li> <li>○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에 1,0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정재훈 사장이 3,5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경영 악화의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반납할 필요</li> <li>○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계 승인을 해준 것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재개로 표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재가동을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으므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언론 대응에 유의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어실 내 CCTV가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안 마련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 주제어실의 CCTV 영상 데이터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정 마련 필요</li> </ul>
<부실원전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건설의 한빛 3·4호기 점검·보수 비용 자체 부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서면 계약 확보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의 구체적인 한빛 4호기 보수 계획 설계 필요</li> <li>○ 한빛 4호기 격납건물라이너플레이트(CLP)의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인하여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책 마련 및 책임 이행 필요</li> <li>○ 원자력 발전소의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묻는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필요</li> </ul>
<안전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드론 공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과법」 제58조를 개정한 후 교란기를 사용해서 무선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필요</li> <li>○ 불법 드론 공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상황이 있으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확보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드론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야간 투시경, 고성능 카메라 등의 장비 확보 필요</li> <li>○ 드론 및 기타 위험 요소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대책 검토 필요</li> <li>○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PC 운영체제(OS) 교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보안 시스템 강화, 관련 인력 확충, 보안 교육 강화 등 사이버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 등 특정국가에서 시도한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면하게 조사하여 대비할 필요</li> <li>○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 발전소 간에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의 프로세스 구축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서로 협력하고 암스트롱(ARMstrong) 로봇 같은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원전을 구현할 필요</li> <li>○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원자력 안전 사고로서 국민 안전과도 연결되므로, 무리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사고로 근로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li> <li>○ 계획예방 정비가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계획예방 정비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li> </ul>

## 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1) 과학기술인공제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뢰성이 높지 않은 신생 회사와 일본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500억 원 규모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li> </ul>

###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같은 날에 운영한 것은 부적절</li> </ul>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제척·기피·회피를 하는 것이 타당</li> </ul>
<방송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표형 프로그램의 조작 가능성·의혹 개연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 필요</li> <li>투표형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 101에서 투표 조작이 발생한 사실이 경찰로부터 공개됐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재방송·방송사 다시보기·유튜브 등으로 유포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 필요</li> <li>프로듀스 X 101의 투표 조작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높은 수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li> <li>뉴스에서 집회 참석 인원 관련 틀린 자막을 내보낸 경우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의 게시글을 언론이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 없이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것에 그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li> <li>○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tbs 교통방송의 협찬 빙자 광고 같은 문제 사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와 법적 제재 필요하고, 기존 편파적 심의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li> <li>○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의 심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재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 규정에 마련해야 할 필요</li>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 및 성범죄 보도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ul>
<p>&lt;통신심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문서 위조와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비 필요</li> <li>○ 10대 주요 사이트의 전체 시정요구 건 중 해외 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업자와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li> <li>○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심의와 시정 요구가 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li> <li>○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 자율 규제 건수가 적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어린이 유튜버의 인권 문제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점검 필요</li>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담당 경찰관의 실명</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의 담당 경찰관(주한미국대사관 점거 사건)의 실명과 휴대전화를 공개한 개인정보를 즉각 차단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 기간에 댓글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실시간 검색어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li> <li>○ 주권방송의 아동이 등장하는 정치적인 동영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제재할 필요</li> <li>○ 유튜브 등을 통한 외국인 여성 결혼 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어린이 실시간영상재생(OTT) 콘텐츠의 프리롤(pre-roll) 광고 앞에 어린이 시청 안내 광고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업 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과 일반인 신고에만 의존해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유튜브의 시정 요구 이행률이 16.5%로 낮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불법 정보 유통의 시정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li> <li>○ 군사 보안 시설의 40%가 구글 위성 지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대처 필요</li> <li>○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li> <li>○ 마약에 관한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심의를 강화할 필요</li> <li>○ 마약, 음란물 등의 불법 정보가 다크 웹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접속 또한 계속 증가 추세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책 마련 필요</li>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하여 삭제나 접속 차단뿐 아니라 상습 게시자들에 대한 계정 이용 해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변조 및 무허가 불법 의약품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서 시정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li> <li>○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총기 판매나 폭발물 제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불법 무기 사용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시정요구 조치를 실시해서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 노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li> </ul>
<p>&lt;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범람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화된 대책 마련 필요</li> <li>○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이 심각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랜덤 채팅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매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할 필요</li> </ul>

#### 4) 한국방송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lt;일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회 현안 보고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li> <li>○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2018년 12월 연임 취임사에서 천명했던 신뢰도와 영향력 제고, 조직 유연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li> <li>○ 자유한국당 로고 노출 사건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것은 부적절</li> <li>○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관한 보도를 둘러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공방에서 한국방송공사의 대응이 지나치게 빨라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존재</li> <li>○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국방송공사 여성 기자를 유튜브 방송에서 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측의</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공식 반응이 없는 것은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가 검찰 취재에 관하여 외부 조사위원회를 도입했는데 설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 필요</li> <li>○ 사내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편성 규약의 실효성 확보,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차단 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했으므로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자회사인 KBS 아트비전과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소유한 더블유에프엠(WFM)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대한 조사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방송 영상 데이터는 국민의 큰 자산이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데이터를 생산·축적·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시사기획 창 의 태양광 관련 탐사 보도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분명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li> <li>○ 조사 연구 수당을 특수활동비처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li> <li>○ 한국방송공사가 대한축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축구 남북전의 동영상을 공개할 필요</li> <li>○ 지상파 방송사 재송신 비용(CPS)을 인상하려는 계획은 종합 유선 방송(SO)에게 부담이 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 필요</li> </ul>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운영 규정에서 보조 동의안 규정과 의사진행발언 1회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소수 의견을 차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li> </ul>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가 모스크바 특파원의 공금 횡령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의 ‘조국으로 조국을 보다’ 방송을 제작할 때 나타난 제작진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진상 조사를 실시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노사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 문제를 다룰 때 소속된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을 방지할 필요</li> <li>○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KBS 노동조합의 신임 투표 결과 불신임 비율이 높으므로 반대 성향의 노동조합을 포용할 필요</li> </ul>
<지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 경영 계획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지역국의 기능을 광역 거점으로 이전할 필요</li> <li>○ 지역국을 광역 총국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면 재난 방송의 기능 발휘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계획 검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재난 보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검토·시정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 지역 방송국 소속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380명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지역 인재를 유출하고 지역 방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li> <li>○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 협찬금 부담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제도 개선 필요</li> </ul>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사기획 창의 태양광 관련 탐사 보도의 제작진을 좌천한 것은 부적절</li> <li>○ 정년·명예퇴직자 69명을 뉴스 편집·상품 기획(MD)·기술 지원 분야에 재고용해서 평균 연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방송공사의 역삼각형 조직 구조를 감안했을 때 부적절</li> <li>○ 연가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엄중하게 징계할 필요</li> </ul>
<성평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한 성평등 기본규정을 시행하고 성평등 센터를 활성화시킬 필요</li> <li>○ 50대 이상의 여성 앵커에게 메인 앵커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정 직군에 특정 성별·연령이 집중되는 인적 구성을 해소할 필요</li> <li>○ 여성 보직자가 9.76%로 지나치게 낮으므로 개선 필요</li> </ul>
<시청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출신으로 구성되어서 이념적으로 편향될 우려 존재</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축구 남북전의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적절</li> <li>○ 평일 23시대에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은 광고 수익을 포기하는 행태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의 검토 필요</li> <li>○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의 진행자에게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제작비가 적게 드는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검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제작해서 송출하는 대신 대다수 시청자가 이용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UHD 방송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ul>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이 공표한 피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같은 보도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취재 담당 팀을 배제하고 새로운 특별취재팀을 만든다는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li> <li>○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사장·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에서 한국방송공사가 취재원 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내부의 각별한 성찰 필요</li> <li>○ 뉴스 9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노래를 검찰 개혁 동요라고 보도한 것은 부적절</li> <li>○ 농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뉴스를 지나치게 많이 보도한 것은 부적절</li> <li>○ 뉴스 9이 최순실 국정 농단과 비교했을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부적절</li> <li>○ 명절이나 재난·재해 상황이 아님에도 서초동 촛불집회를 촬영할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이므로 부적절</li> <li>○ 저널리즘 J 프로그램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내용이나 MBC 드론 보도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다룬 것은 부적절</li> <li>○ 한국방송공사가 2015년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공정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으므로 기준 마련을 위한 근본적 고민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방송공사(BBC)의 정치수석고문(chief adviser politics)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필요</li> <li>○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론 본연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지난 3년 동안 한국방송공사 보도 중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건수가 132건으로 지나치게 많은데, 방송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li> <li>○ 국민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검토 필요</li> <li>○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이 백두산을 중국식인 창바이산으로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주의 필요</li> <li>○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자사 법조팀 기자에 대한 비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 존재</li> <li>○ 한국방송공사 뉴스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을 보도할 때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초상권 침해가 있었으므로 사과 및 책임 이행 필요</li> </ul>
<p data-bbox="231 1254 343 1288">&lt;제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TV의 대화와 희열을 제1TV에서 4회 재방송하면서 간접광고(PPL)를 노출한 것은 광고 반납 선언의 위반인데, 한국방송공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 반납 선언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li> <li>○ 교양 프로그램 철의 미래와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가 각각 협찬사인 포스코와 콜핑의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는데 이는 광고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므로 점검 필요</li> <li>○ 협찬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인 조이디엑스·제이와 이미디어의 이름을 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점검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이므로 프리미엄 광고(PCM)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li> <li>○ KBS 월드에서 성형수술에 관한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국가의 이</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미지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하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 제작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점검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외부 제작사에게 20%의 간접비를 책정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관행이므로 개선 대책 마련 필요</li> <li>○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노동자인 스태프에게 표준 근로 계약이 아니라 턴키 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li> <li>○ 국민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추적·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필요</li> <li>○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웨이브(wavve)를 출범시켰음에도 한국방송공사가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li> <li>○ 드라마가 한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상 경영 대책의 일환으로 드라마를 줄이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드라마 외주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방영권만 구입하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의 오늘밤 김제동의 대체 프로그램인 더 라이브의 연출진·제작진이 전작과 거의 동일하므로 부적절</li> <li>○ 보이스피싱은 노인·청년·서민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절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과 같은 캠페인을 방송으로 실시할 필요</li> <li>○ 기상 캐스터 의상이 외부업체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당한 계약을 치르고 의상을 제공하는 업체가 몸에 맞지 않는 의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의상관련 계약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li> </ul>
<p>&lt;기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방송공사의 UHD 송신을 지원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D 방송에서 나오는 UHD 자막을 지워서 시청자의 오인을 방지할 필요</li> <li>○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인증을 받지 않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li> <li>○ 정보 보호 조직을 점검하고 고출력전자기파(EMP)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개선할 필요</li> <li>○ 방송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와 실적이 해외 주요 방송사에 비하여 미흡</li> <li>○ KBS 월드의 송출 품질을 점검할 필요</li> <li>○ 대전에 있는 재난 복구 시스템(disaster recovery system)의 운영 방식을 현대적으로 개선할 필요</li> </ul>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손실 발생과 시청률 하락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 경영진이 책임을 갖고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li> <li>○ 지난 8년 동안 한국방송공사의 광고 매출이 44.4% 감소했음에도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 대책 실행안이 다소 미약하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도 대부분 유료방송을 통하여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상기를 통한 시청 가구는 3.3%밖에 되지 않으므로, 수신료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저작권 개념으로 재송신 비용(CPS)를 올려 받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li> <li>○ 수신료 징수 과정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수상기 실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수상기 등록 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므로 한국방송공사가 관련자를 처벌한 후 새롭게 수상기 등록 신청을 받아 대장을 작성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징수 과정에서 텔레비전 수상기 등록 위탁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이유로 한국전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li> <li>○ 「방송법」 제64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예외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에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상기</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실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편 「방송법」상 자발적 등록 신청은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논란의 소지 제거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수상기 실사 관련 자료가 개인정보인지 검토할 필요</li> <li>○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 여부를 등록할 때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것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제3자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 한국방송공사가 법적 해석을 받아볼 필요</li> <li>○ 전기 요금을 체납하는 약 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체납 가산금까지 받는 것은 가혹한 조치이므로 제도 개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시청자에게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4억 원 규모의 한반도 외교 문서 발굴 사업을 진행한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li> <li>○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공탁 기간 10년이 끝났으므로 공탁금의 국고 귀속 필요</li> <li>○ 축구 남북전 중계 관련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한국방송공사가 대행사로부터 위약금 또는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가 회계 분리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li> </ul>

### 5) 한국교육방송공사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속기록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개선 필요</li> </ul>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의 전현직 조합원의 비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조사, 의법 처리 및 징계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정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적자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채널방송(MMS)인 2TV를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운영할 필요</li> <li>○ 박치형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의 관련자라는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와 갈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소 필요</li> <li>○ 조직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거쳐 정치 편향 요소를 일체 배제하는 쇄신을 시도할 필요</li> </ul>
<콘텐츠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이나 군 단위 지역에서 모여라 덩동댕·입시설명회 같은 인기 있는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불편부당성을 견지하며 평생 교육의 교재로서 다큐멘터리를 적극적으로 제작할 필요</li> <li>○ 좋은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스마트 수어 방송 플랫폼에서 빠져 있으므로 참여에 대하여 검토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필요</li> </ul>
<방송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니하니·최고의 요리비결에서 삼성으로부터 상품의 노출을 조건으로 협찬을 받았다면 규정 위반이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점검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식채널e가 북한 홍보 방송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다문화 고부 열전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다큐 시선의 주제 선정과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의 출연자 선정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으므로 부적절</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 뉴스가 교육 이외의 정부 국정 운영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 필요</li> <li>○ 프로듀서(PD) 상당수가 보직이나 기획 관리에 종사하고 자체 제작</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프로그램에 외주 프로듀서(PD)가 41명이나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작 인력에 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점검 필요
<학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 준비 시기가 빨라진 경향이 있으므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중학생 대상 서비스·콘텐츠를 강화할 필요</li> <li>○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사용해서 오타를 교정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연계 교재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급변하는 사교육 시장의 흐름이나 유튜브 교육 부문에서 순위가 높은 스위트티비 등을 참고하여 코딩 교육 같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li> </ul>
<스마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유튜브 채널인 모모(MOMOe)가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 존재</li> <li>○ 유튜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작한 유아 프로그램 콘텐츠에 부적절한 대출·게임 광고가 게재되고 있으므로 구글에 시정 요구 필요</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를 받는 방송사이므로 프리미엄 광고(PCM)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류·사교육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부적절</li> <l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뚜앙, 뽕뽕이 같은 파생 상품의 판매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li> </ul>

## 6) 방송문화진흥회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이사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기화 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는 자이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부적절</li> </ul>
<진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신산업을 진작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산업계의 일원으로서 디지털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에 참가할 필요</li> <li>○ 전주와 목포 미디어 센터가 폐쇄되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대폭</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p>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 예산도 축소되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가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p>
<p>&lt;MBC 기획·편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가 사장 선출 방식에서 시민 자문단 평가를 40% 반영한 것을 참고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 및 지역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경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지역 MBC 사장들을 일괄 해임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안은 임기 제도의 본질을 깨뜨린 것이므로 부적절</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로서 독단적으로 지방MBC 사장들의 해임을 추진한 최승호 MBC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법적인 경영 행위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최승호 MBC 대표이사에게 배임죄에 해당하는 인사를 이유로 경영 책임을 물을 필요</li> <li>○ 매 정권마다 MBC의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므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구조 개편 등 쇄신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li> <li>○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전임자와 달리 MBC에게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li> <li>○ MBC의 「방송법」 및 방송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논의 필요</li> <li>○ MBC가 다면적 콘텐츠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방송통신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가 만든 라코이(RACOI)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방송사와 달리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점에서 부적절하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조치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가 방송문화진흥회보다 지분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더 많은 기부금을 낸 것은 부적절</li> <li>○ MBC가 재난 방송 편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점검 필요</li> <li>○ MBC의 방송 실시결과보고서에 재방송을 본방송으로 보고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검토 필요</li> <li>○ 좋은 시간대에 재방송을 해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의 근본적인 점검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재방송 비율을 낮추고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지역 MBC의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li> </ul>
<MBC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 뉴스데스크가 집회 참여 인원을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주의 필요</li> <li>○ MBC 보도국장이 타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징계 등 조치 필요</li> <li>○ MBC 기자 또는 보도 관계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조치를 취할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뉴스의 균형 감각 제고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li> <li>○ MBC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때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불편부당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MBC가 수사기관이 공표한 피의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 필요</li> </ul>
<MBC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가 기간제 계약직 아나운서의 계약 갱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의 결과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의 개선 조치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의 문제에 대하여 방송 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노동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li> <li>○ MBC가 작가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지 않아서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점검 및 개혁 필요</li> <li>○ MBC의 인적 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신규 채용을 늘릴 필요</li> <li>○ MBC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고령 여성 앵커, 남성 기상 캐스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 필요</li> <li>○ MBC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의 노력 필요</li> <li>○ 양주 MBC 문화동산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주연급 배우에게 사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검토 필요</li> <li>○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가 낮은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등 방송사 내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재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MBC 이사회에 지역 인사가 참여하고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의 개선 노력 필요</li> <li>○ 과업 불참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가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인사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li> <li>○ MBC의 내부 징계가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가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서 처리할 필요</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편에 대한 특혜 등으로 인하여 지상파 광고 매출이 대폭 감소해서 MBC가 경영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li> <li>○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달리 수신료를 받지 않는 MBC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 국한해서 중간광고, 협찬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검토할 필요</li> <li>○ MBC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서 방송광고·협찬 등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내역이 많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시정 필요</li> <li>○ MBC의 경영 적자의 원인은 내부 갈등과 언론으로서의 공신력 상실이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정확한 원인 진단 필요</li> <li>○ 지역 MBC가 재정 상황이 어려우므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전파료 배분 수입 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li> <li>○ MBC의 호봉제 전환이 조직 화합·안정에 기여했지만 우수 인력 관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대안 마련 필요</li> <li>○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MBC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조치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경영 개선을 위해 과감한 통폐합이나 구조 개혁을 감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li> <li>○ MBC의 비상 경영 계획 단순히 임금 비용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가 공격적인 투자나 자산 매각 같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MBC가 경영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인력 구조조정을 감행할 필요</li> <li>○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드라마 외주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방영권만 구입하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li> </ul>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가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li> </ul>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디지털사업>	<p>제작해서 송출하는 대신 대다수 시청자가 이용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UHD 방송을 보내는 방안에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C의 애플리케이션 12개 가운데 6개가 거의 활성화돼 있지 않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점검 필요</li> </ul>

## 7.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14건)

#### <일반: 24건>

- 기관장 차량의 휴일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차량 운전직원에게 휴일 근로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우수 인력 확보와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관련 진흥원 내 12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 직원과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관련 진흥원의 이사회 체제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유지하게 된다면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중점 연구 분야가 바뀌는 풍토를 개선할 것
-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출연연 기관장이나 과학기술원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무회의 또는 각 부처 사이에서 연구개발, 실물경제, 산업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
- 산하 공공기관에서 파견직 근로자의 파견계약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실태를 점검할 것
-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된 5대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연구산업진흥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
- 개인용 컴퓨터(PC)의 보안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윈도우 7 개인용 컴퓨터(PC)를 모두 교체할 것
-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과 R&D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지능형 로봇, 가상·증강 현실, 혁신 신약,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를 선도적으로 주도할 것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활동이 출범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초교양과목 커리큘럼의 개발을 선도할 것
- 산하기관의 전문가가 사외이사 활동에 참여할 때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이 자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일률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통화료 지원 시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한 6개 기관을 철저히 관리할 것
- 정보통신 관련 5개 진흥원의 통폐합 또는 협업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
- 지방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의 근무 실태를 파악할 것
- 부정한 연구자가 연구에서 배제되는 풍토를 조성할 것
-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피폭 조사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할 것
-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예외 업종에 연구개발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
- 5G 기지국 설치사업 투자세액공제 요율을 확대하고 시기를 연장할 것
- 국공유지 내 5G 기지국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공유리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것
- 과기정통부의 직제 개편 과정에서 네트워크정책실과 그 산하의 정책관의 명칭이 행정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변경 방안을 검토할 것

#### <기초원천연구정책: 27건>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DNA+드론기술개발 사업 기획 시 농촌의 수요를 반영할 것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기초원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과 차별화할 것
- 기초연구실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로봇용 초경박단소 고정밀 감속 기술개발 추진 시 국내 기업의 개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것
- 수상태양광 내 반도체 칩의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구축 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할 것

- 수소 생산·저장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할 것
- 연구윤리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
- 부실학회 참가자의 출장비를 철저히 회수 및 환수할 것
- 연구비 횡령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
-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신라젠 펙사백,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수할 것
- 한국연구재단의 감사 역량 증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강구할 것
- 부실학회 출장비 회수 및 환수를 논의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대학 소속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 결과의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부실학회 및 학술지 참여 비중이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이유를 분석하고, 부실학회 및 학술지 참여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감사관실 내 재심위원회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직권 취소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연구재단에 대하여 최근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허위 제출 여부를 파악할 것
-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독립 청사의 건립을 검토할 것
-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산업수학 및 의료수학, 인공지능 관련 수학 연구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검토할 것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원 부설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뇌연구원과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에 구축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치매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슈퍼컴퓨터 도입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하여 중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거대공공연구정책: 28건>

- 우주개발 정책 관련 논의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활동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민간주도 뿌리산업의 성장을 추진할 것
- 공정한 우주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화·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우주개발 기반 조성 국제협력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소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
-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이 절대적인 바, NASA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
- 루나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 우주 사업의 지체상금 기준을 하향하고, 입찰 가격 하한선을 상향하며, 기술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할 것
-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므로 이를 점검할 것
- 진주시의 2021년 초소형 위성 개발이 국고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 천리안 위성 2A호 발사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경희대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검토할 것
-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저비용 소형 발사체 개발과 초소형·소형 위성 발사의 추진을 검토할 것
-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소형 발사체 제작 활용에 있어서 단순 발사보다는, 향후 활용성·경제성이나 시장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할 것
- 초소형 발사체의 연소 시험장 구축에 따른 부지 문제를 고흥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것
-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한계, NASA와의 협의 과정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NASA 측에 궤도선, 연료 버킷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우주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
- 달 탐사 사업 관련 대면회의에서 NASA가 제안한 방안이 과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사업 평가단에서 검토된 사업 위험 해소 방안의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된 사안이라면,

당시 담당자를 포함하여 향후 방안들을 논의할 것

-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직급 간 소통 문제와 이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산업 기초연구의 직접 지원을 위해서 국가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운영 로드맵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
-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의 건립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과기정통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국가 정책인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경상북도·경주시 외에 과기정통부가 직접 그 역할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검토할 것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의 건립 및 대안에 관하여 검토할 것
- 과기정통부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준비할 것
- 북한이 방출하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가 조사할 것
-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핵 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피폭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북한이탈주민 피폭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것
-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유해성 판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폐패널의 중금속 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문제 해결 R&D 예산을 활용하는 등 폐패널 처리(재활용, 유해물질정화 등)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R&D’,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주제와 과제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

### <과학기술일자리혁신: 30건>

- 더블유에프엠(WFM)의 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서 발급은 관계 법령에 의해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한 것이므로, 잘못된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할 것
- 과기정통부의 주도로 출연(연)에서 수요기업과 중소기업을 잘 연결하여 제품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의 요구수준을 잘 전달하고, 이러한 요구에 중소기업 제품이 잘 부응해서, 해당 제품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이 낮은 문제, 피인용 횟수가 적은 문제, 기술이전 계약 건수의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 System) 폐지 및 연구행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출연(연)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통하여 본원 통합이나 기능 재조정 조치를 검토하고, 출연(연)의 지역 분원 설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운영 규칙 개정을 검토할 것
- 출연(연)이 향후 닥칠 수 있는 기술 종속의 위험(risk)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연(연)의 간접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직접 연구개발(R&D)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단일 법인화 등 출연(연) 통폐합을 검토하고, 직접 R&D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정량 요건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4개 시도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권역별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량 요건을 완화할 것
-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인해서 출연(연)의 인건비가 대폭 늘고 주요사업비가 줄었으므로, 국가가 범정부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할 것
- 출연(연)의 기본 출연금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 규제를 풀어서 개별 출연(연)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현재 논의 중인 출연(연) 감사 기능 일원화 과정에서 감사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판·검사 출신을 감사단장 및 감사위원으로, 검·경·감사원의 수사관·조사관 출신을 감사단원으로 포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활동이 거의 없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연구소 인정 취소를 검토할 것

-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권취소 외에 환수, 과징금 징수 및 형사 처벌 등 제도 신설·개선을 검토할 것
- 출연(연)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과학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및 정년 연장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성실 실패 인정 및 평가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것
-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지원을 검토할 것
-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일부 지역적 중복성이 있으나, 각각의 목적과 방식에서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기반으로 구매되는 고가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부실한 인턴 관리와 증명서 발급 날조 의혹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조사할 것
- 3년 내로 무상 대부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는 출연(연) 지역 조직이 9곳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
- 연구소기업에 대한 경영 불간섭이 관행이어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생기면 제어 수단이 부재하므로 행정 조치 및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한국식품연구원의 구 사옥 매각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기관별 R&R(Role and Responsibility) 재정립을 통한 수익 구조 포트폴리오 추진이 출연(연)의 연구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할 것
- 출연(연)의 파견 용역직 노사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출연(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이 5년째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출연(연)은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타 공공기관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장애인 고용분담금 지원, 학생연구원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의무 고용률의 차별적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연(연) 연구원이 외부 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연(연) 내부에서 연구하는 직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시행 이전에 예산·인

력 등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지원과 검토를 선행할 것

- 연수 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유연한 운영을 검토할 것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레이더 탐지 실증 실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비가 부족하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
- 강소특구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

#### <미래인재정책: 28건>

- 이공계 분야 인구구조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정부·출연(연) 및 기타 산하기관 차원의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할 것
- 2020년부터 시행될 제5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도 내실 있게 제시할 것
- 기술사에 대한 법령 체계가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다른 전문분야처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의계약 체결건수 증가 및 관련 은폐 의혹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
-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예산 투자와 함께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 4개 과학기술원 간 적절한 업무 분담 및 협업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 4개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재편할 것
- 4개 과학기술원 통합 이사회 설치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 4개 과학기술원 간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한 협업 모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의 연구비 해외 유출 및 배임 혐의 등에 근거한 직무정지 요청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과 비정규직 직원 간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운영목적 등 지침 정비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반감사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광주과학기술원과 한전공과대학교 간 통폐합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감사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BK21 사업이 4개 과학기술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것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행정혁신위원회의 직책수당 및 관공비 인상 결정 과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것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임직원 중 공무원 출신의 방만한 학사 운영 및 경영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시정할 것
-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편 시 과학계·산업계 등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관리 소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
- 전문연구요원의 부실 복무를 방치한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재직인력 및 보직자 중 여성 비율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벡터와 행렬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것
- 국립부산과학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것
-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
- 지하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및 출연(연) 등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보통신정책: 32건>

- 실시간 검색어 조작 행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포털 사이트 상 매크로 사용, 어뷰징, 계정 불법 활용 등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직적 조작이나 지령성 게시글에 대한 포털 차원의 자율 규제체계를 검토할 것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역 여론을 반영하여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율주행 차량 통신신호 방식으로서 국토교통부의 WAVE 방식과 과기정통부의 5G-V2X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
-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하여 조사할 것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농수산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의 진행을 검토할 것
-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법률상 보장할 것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각종 융합 갈등에 대하여 범정부적 중재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극적인 과의존 대응이 필요
- 저소득층이나 고령 세대의 정보 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체 징계요령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정성과 내부 기강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가 2001년부터 추진해온 정보화마을 사업을 흡수해서 함께 활용할 것
-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국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실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한국형 퀀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자 정보통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타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연령별 맞춤 교육계획을 설계할 것
-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액티브X뿐 아니라 웹 표준에 맞지 않는 실행 파일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기술적 여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스마트도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후속 지원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 노사 합의 이행을 위하여 인력 채용 및 운송수단 확보를 추진할 것
- 집배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집배 보로금을 증액할 것
-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을 낮추게 되면 정기간행물 주요 구독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부담이 되므로, 우편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할 필요
- 우정사업본부의 인사행정에서 집배원 같은 현장의 기능직 직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철저히 감독할 것
- 별정 우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속승진 도입이나 당연퇴직 조항 개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우정사업본부 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선발하여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
- 우정사업본부의 이륜차 적재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협조할 것
- 우정사업본부의 주택청약통장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인공지능기반정책: 16건>

- 인공지능 관련 조직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
- 인공지능 운용 및 연구개발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단지의 예산 과소계상 문제를 해결할 것
- 부처 차원의 인공지능(AI) 로드맵을 신속히 제작할 것
- 국외 인공지능(AI) 전문가 영입 전략을 수립할 것
- 민간의 블록체인 자격증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윤리 기준을 마련할 것
- 국가 보유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공개 등 기관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 여건을 개선할 것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데이터 거래소 개설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인공지능의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AI literacy) 기본교육 정책을 마스터플랜에 포함할 것
-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
- 인공지능·블록체인·데이터 관련 법률의 통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
-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설계 기준 마련에 지침을 제시할 것

- 인공지능(AI) 스피커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감시·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딥페이크 관련 실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 <소프트웨어정책: 20건>

- 코딩 민간자격 남발 관련 과기정통부가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에 대한 검토 필요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센터별 자력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광주 가상현실(VR) 체험관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소프트웨어의 저변확대, 교육 및 인재육성, 제값 받기, 클라우드 기술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 원천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배려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것
-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 관련,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적 최고 정보 책임자(CIO)와 최고 기술 책임자(CTO)의 역할을 수행할 것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이 단일 과제로 끝나지 않고 초기 버전 공개 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기술을 누적하고, 연구 인력이 사업화까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지원할 것
- 소프트웨어 기초연구·응용기술·사업화 각 단계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담조직에 대해 검토할 것
- 소프트웨어 보안, 품질 관련 중점대학·대학원 설립을 검토할 것
- 개방형 운영 체제(OS) 확산 및 국산 운영 체제(OS) 이용 확산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추진할 것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동 사업이 우리나라 혁신

인재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기관 확대 또는 완전 개방을 통해, 인증 획득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활동 관련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를 지원할 것
-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소프트웨어 품질관리원 신설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소프트웨어 품질센터(또는 품질관리 전담사업단) 신설 방안을 고려할 것
- 정보통신기술(ICT) 노동자의 노동시간 제한 미준수 기업에 대해 입찰 시 불이익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
- 데이터 주권과 보호를 고려하여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재점검할 것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사업이 마케팅 기업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
- 클라우드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라이선스 비용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정보통신산업정책: 4건>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상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예비전원 설비 설치의 면제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적용 지침이 없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예비전원 설비 설치의 면제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5G 산업을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5G 플러스 전략을 점검·보완할 것
- 5G 기지국 설치 촉진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홈쇼핑 업계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32% 정도를 부담하므로, 기금을 중소 납품 업체 문제나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홈쇼핑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 26건>

- IoT 기기 보안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IoT 기기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물인터넷 보안점검을 포함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할 것
- 통신사 및 인공지능 스피커 제공 업체가 이용자에게 프라이버시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
- 과기정통부 산하의 기관별 충무계획 작성 현황을 점검할 것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5G 네트워크 보안 관련 연구개발 과정 관련 논의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것
- 과기정통부와 관리하는 개인용 컴퓨터(PC)의 윈도우 7 제품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 부문 클라우드 이용 증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로서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여 유사시에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국방부 등이 대응하고 협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 영세 중소기업의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지원할 지역 정보보호 기업 육성센터를 건립할 것
-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할 것
- 서울특별시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이 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통신기술(ICT) 보유현황에 맞는 차등화 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이버 안전망 구축 수준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와 보안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 정보보호진흥센터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일부 휴대폰 단말기의 내장형 지문 인식 보안 문제에 대하여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화웨이 제품의 보안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기술 준비 지수가 하락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할 것
-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포털 사이트 계정 무한 생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조치 및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다크웹에 대한 정보 감시를 강화할 것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모든 회사의 5G 장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것
-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적기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보안 조치를 강구할 것

#### <통신정책: 18건>

- 2018년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연구를 실시할 것
- 3.5GHz 대역 단말기의 구입자가 28GHz 대역에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소비자 사전 고지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 현재 판매 중인 단말기는 28GHz 미지원 상태이므로, 제조사가 이를 단말기 제품에 명시하게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개통 시에 고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높으므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5G 단말기가 지나치게 비싼데, 5G 단계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본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G 보급형 단말기의 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5G 기지국이 없는 청주·제천·충주 같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5G 가입 단말기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과기정통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복잡한 통신비 감면 제도를 통합·단순화해서 요금제에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거주 지역에 따라서 시내전화 요금 부담에 차별이 없도록 시내전화 요금 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것
- 내구재 대출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 행위이므로 철저한 실태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것

- 통신 품질 평가의 정확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해서 15·16으로 시작하는 대표전화의 요금 부담 주체를 발신자에서 수신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이 먼저 수신자 부담인 14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망 사용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의 망 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것
- KT가 아현국사 통신국 화재 이후 청문회에서 비난연 재질의 제어반 전체를 교체하겠다고 답변해놓고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점검할 것
- 국민 206만 명이 긴급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대비할 것
- 국민들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전화 단말기의 사설 수리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
-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 변경 사건이 상호접속 고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할 것

#### <방송진흥정책: 8건>

- 홈쇼핑 방송에 대한 스마트폰 결제에 따른 매출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 2018년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채널 연번제·채널 순환제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국방TV를 공공 채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유통 약자들을 위하여 다중융합채널의 허브로서 데이터 홈쇼핑 채널 증설을 검토할 것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홈쇼핑에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에게만 생방송 편성을 금지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경쟁을 부정하고 「방송법」 제4조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재허가가 취소된 채로 1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므로 시청자·소액 주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조속히 그 결론을 내릴 것
- 8레벨 잔류 측과대(8VSB) 전송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재송신 비용과 관련한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전파정책: 21건>

- 재난 시 백팩형 이동기지국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도록 현행 「전파법」 상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
- 19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전파법 전면 개정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자기적합확인제도가 규제 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
- 드론에 대한 현재 유일한 방어수단인 전파 차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을 검토할 것
- 북의 군사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드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기술 개발에 노력할 것
- 무선국 검사비 수수료 요율 및 금액 규정 변경 시,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연한 조정을 위해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으로 관리하도록 「전파법」 개정을 검토할 것
- 무선국 허가 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5G 조기 구축을 위하여 기지국 개선택차를 간소화할 것
- 신속한 5G 기지국 준공검사를 위해 무선국 검사 기관 확대를 검토할 것
- 무선국 검사 기관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5G 송신기의 28GHz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할 것
- 5G 송신기의 주파수 28GHz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
- 5G 송신기의 전자파 유해성 여부 검사를 무선국 검사와 동시에 진행하여 비용을 절감할 것
- 01X 번호 자원 활용 및 주파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G 서비스 조기 종료 방안을 검토할 것
- 군 주파수와의 혼간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 다양해지는 불법 통신 기자재 단속을 위해 전파관리소의 단속 인력을 증원할 것
- 주파수 경매 제도, 할당 대가 산정 문제, 재할당 문제,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

- 무선국 준공 신고 시 45일 내 준공 검사를 하고, 45일이 지나면 검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출력전자기파(EMP) 방호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준 마련 및 취약점 평가를 넘어 실제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또는 연구를 진행할 것
- 전자파 차단제품 모니터링 및 인증검증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 <과학기술정책: 11건>

- R&D 공동관리 규정인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과 각 부처 전문기관 별 R&D 법령·매뉴얼 151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부처와 연구자들 간 R&D 관련 협업의 촉진을 위해서 관리 규정·지침을 제도화할 것
- 과학기술 R&D를 선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외부 민간전문가 영입 규모를 확대할 것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심의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문가들이 각 부처·부서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국가 연구개발 기획과 예산을 주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할 것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내 회의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할 때 현실 적용 문제를 고민해서 지원할 것
- 「과학기술기본법」상 성장동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검토할 것
-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
- R&D 센터나 첨단기술산업 전반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지원·조세감면을 활용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과기정통부가 소재·부품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기관과 산업체의 생태계 유지와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과기정통부가 소재 산업 관련 원료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
- 한일 무역 분쟁 이후 지역별로 방사광가속기·중이온가속기 같은 대형 연구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 연구개발(R&D)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구개발투자심의: 4건>

- 연구개발(R&D) 과제의 협약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것
- 연구개발(R&D)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 R&D 예산이 20조 원을 넘었지만 그 증가율이 총예산액 증가율이 미치지 못해서 실제 연구 현장에서 예산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므로, 과기정통부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성과평가정책: 13건>

- 경제 성장을 고려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의 총사업비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가 법안을 발의할 것
- 예비타당성조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 R&D가 상용화(commercialization) 및 이익(profit)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사업화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
- 연구 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연구지원 인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
- 기술료를 연구원 보상비와 연구 재투자로 배분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공연구 관련 사례를 검토할 것
- 연구 관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예산 분배, 기획, 연구 풍토 개선, 성과 확산을 총망라하는 것이므로, 과기정통부가 주도하여 연구 관리가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 다년도 연구 시 부처의 승인 없이도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선집행하여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탄력적 제도를 도입할 것
- 국가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기술이 아닌 사람을 확보하는 정책을 설계할 것
- 2018년 연구개발 국내 등록 특허 성과는 8만 건인데 특허권을 연구기관으로 넘겨서 국유화 특허 비중이 2.2%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연구 과제 제출 서류를 검증하는 제도를 정비할 것
-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에 있어 연구자의 혼란이 있으므로, 두 부처 간 규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것
- 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복연구와 중복투자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같은 특정한 연구는 중복연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할 것
- 연구개발(R&D) 연구자 연구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공유 의무화 방법을 모색할 것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4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21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
- 중이온가속기가 당초 목표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직원들이 사업 완료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이온 가속기 사업을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가속기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 및 산업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나. 방송통신위원회(68건)

### <일반사항: 3건>

- 언론중재위원회의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도록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여 미디어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에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 건에 대한 조사를 해놓고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3월에 일부 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것
- 각종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할 것

### <방송·통신정책: 39건>

- 무선 이어폰에 안테나 기능이 없어서 FM 라디오 재난방송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방송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관리 기관과 함께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방송 중계 설비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역방송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방송이 공익성, 지역성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실시간영상재생(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산어촌지역의 미디어 접근성 증진을 위해서 도 단위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도 단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협의할 것
-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5G·좋은 콘텐츠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으므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tbs 교통방송이 현행법에 따라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지상파·종편 방송이 ‘재방송’을 내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본방송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최근 3년간 방송실시결과보고서에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시정조치 내역 또한 없으므로, 철저히 점검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지상파, 종편 방송 모두 초방, 재방

- 비율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각 장르별 이행 실적까지 점검하여 과행적 편성을 바로 잡을 것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제재 수준별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항별로 감경이나 가점을 적용하고,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송국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 프로그램이 법적 제재로서 주의·경고를 받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재허가 기준을 변경·수정할 것
  - 통신사가 새로 출시되는 단말기에서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기능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할 것
  -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듯이 동영상서비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검토할 것
  - 8레벨 잔류 측과대(8VSB) 전송 방식의 비용을 부담한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재송신료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검토할 것
  - 공공자산인 전파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민방의 소유지분 한도 축소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차별 문제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아서 세원 잠식이 나타나므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과기정통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계보고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와 네이버 같은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할 것
  - UHD 방송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시청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HD 방송에서 나오는 'UHD' 자막은 삭제하도록 할 것
  - 재송신 비용(CPS)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사업자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송신 대가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대가 산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하므로, 학계·정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대가산정위원회'를 설

립하여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 한국방송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방송법령에 따른 내부지침 등에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에 대한 이행 절차 등을 명료하게 정비하도록 할 것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의 예산을 확대하고 차량 수를 늘려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아리랑 TV, 언론중재위원회, 국악방송에 연간 500억 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투입되는 반면, 정작 지역 방송에 대하여 45억 원만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 조치를 마련할 것
- 넷플릭스가 국내 실시간영상재생(OTT) 서비스와 달리 망 사용료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국내 영업에서 유리하므로 역차별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 이른바 유사보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tbs 교통방송뿐 아니라 종교 방송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유료방송 업체가 송출 수수료를 콘텐츠 산업 발전이 아닌 불법 보조금 유포 같은 불법적인 방편에 사용하여 유선방송 산업 구조가 혼탁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영방송 영향력 확대나 시민의식 고양을 통한 근본적인 허위·조작 정보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게 부당한 간접비를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실태를 파악할 것
-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노동권·인권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1인 방송 등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송사 작가나 외주제작사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것
- 서초동 집회의 참여 인원에 대한 MBC의 보도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할 것
- 방송사의 드론 불법 촬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재방송을 본방송처럼 하는 등 지상파 방송사의 부적절한 재방송 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
-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크로스미디어랩 도입을 검토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살에 대한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중소기업 방송 광고 제작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케이블 방송 시청률 조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청률 검증 등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이용자보호정책: 26건>

- 구글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점검을 실시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한 검할 것
- 네이버나 구글이 「정보통신망법」 제31조를 위반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쏘카·타다 등이 동의를 받아서 블랙박스 음성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 플랫폼의 음성정보 수집·보관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음성정보가 올바르게 수집·보관·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검토할 것
- 틱톡 관련 10대 개인정보·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 우리카드가 탈퇴한 회원정보 1만 8,000여 건을 파기하지 않았음에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점검할 것
- 구글이 패스워드 체크업 서비스를 모든 구글 사용자에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불법적으로 유출된 40억 건의 계정정보를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를 실시할 것
- 결합상품 해지 절차의 간소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
- 연도별 망 이용 단가 계약이 실제 얼마에 체결됐는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은 얼마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

- 아프리카TV에서 결제 한도를 넘어서는 대리 결제, 우회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사이버 범죄 관련 각국 공조를 위해서 노력할 것
- 1인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폭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도 및 정책 논의를 진행할 것
-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사의 결제 서비스·쇼핑몰 등을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 MBC 애플리케이션이 오디오 녹음을 허용하지 않으면 접근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를 실시할 것
- 페이스북 워치(watch)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올라오는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
- 휴대폰 사기 판매 등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 관련 호객 행위 등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5G 서비스 출시로 이동통신사 간 불법 보조금 문제가 극심해졌는데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
- 무조건적인 망 이용대가 지불 강제도 문제지만, 5G 시대에 무임승차를 그냥 두는 것은 산업 혁신의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18년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같은 서비스 장애 시 보상에 대한 통신사의 이용약관 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유튜브가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콘텐츠 배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과의존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침 권고를 추진할 것
-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악성 댓글의 혐오·차별적인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것
-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접속 차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광고를 허위로 클릭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광고 해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78건)

### <원전안전규제: 29건>

- 산하기관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배치되지 않는지 인사 정책 기초를 재검토할 것
- 원전 부품 생산 기업이 납품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협의를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고 수습·방사선 영향 평가·제염 문제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 각종 기술 규격, 기준 등을 변화된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
- 연구개발에서 규제·법령 개선에 사용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음부즈맨 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비상근 감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측 소송대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직 윤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윤리 강령에 소속기관 관련 계약 관계에 대하여 회피·제척 등을 규정할 것
- 한빛 1호기 특별조사보고서에 동적제어봉 제어능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누락된 점, 제어봉 고착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 최종 정지까지 50여 분이 소요된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합하는 방안 및 통합이 어려울 경우 전문 산하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 주제어실의 CCTV 영상 데이터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할 것
-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 점검 대상을 확대할 것
-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출력 측정 방식에 대한 사항을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련 기기로서 제어봉위치전송기(RSPT)와 ICI(노내계측기)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검증 없이 교체해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해체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 원전 공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보완 및 개선과 관련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를 장착하도록 조속히 허가를 검토할 것
- 300만 개의 부품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 검사 항목이 100개 정도에 불과하므로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 정기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
- 정기검사 및 임계 허용 후에 노후 원전의 중지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예방정비를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료를 제출할 것
- 원전 지역사무소는 한빛 1호기 재가동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할 것
- 한빛 3, 4호기 공극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점검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 4호기 공극 문제의 규명 과정에서 설계·감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
- 신월성 2호기, 한빛 1, 2호기 사고에 비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하나로 원자로 정지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적절성을 검토할 것

#### <생활방사선규제 관련: 16건>

- 민간 사업장에서 일본 수입 자재의 방사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 검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사선 감시기를 통한 검출 실적 제고를 위하여 부처 간 업무 협의 증진(방사선 검사 업무 일원화 포함), 감시기 점검·검사 또는 성능 향상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
- 공항·항만에서 검출된 유의물질을 신속하게 처리 및 반송하고, 반송기간에 관하여 유의물질 반송 관련 법령 규정을 개선하고, 유의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들이 피폭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라돈 검출 매트리스 등 부적합제품의 폐기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CALI-6나 CALI-6M과 같이 태양활동의 변화에 따른 태양방사선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항공운송 산업 종사자의 피폭선량과 관련된 정보가 현행과 같이 5년만 저장되는 것은 부족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
- 국내 유통 모나자이트의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철 역사에 있는 라돈물질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라돈 아파트 이슈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환경부에 대응 마련을 촉구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생활방사선을 전담 업무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라돈이 나오는 건축자재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조사할 수 없으므로 생산자나 수입자가 라돈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라돈 침대 등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수거, 홍보 등 대응조치를 실시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 검출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것
- 생필품에 있는 라돈의 자가 측정이 번거로우므로 자가 측정 서비스보다는 직접 방문 측정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필요할 것
- 라돈 검출 제품의 수거 및 소각에 필요한 시간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예측하여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
-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조사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

### <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 관련: 5건>

-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임시 저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
-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오류로 인하여 방폐물 관리에 관한 신뢰가 저하되었으므로,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개선 및 추후 원전 해체 시 방폐물 관리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이송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임시저장소 증설 기간 단축 및 추가 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것
- 2024년이면 일부 습식 저장소가 포화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방사능방재대응 관련: 28건>

- 일본에 대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며, 방사능 유출 돌연변이와 같은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등 오염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훈련시 해양오염 문제를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해양오염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계획을 마련할 것
-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하여 해외 인력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할 것
- 태풍으로 인한 일본 방사능 폐기물 유출 등의 사고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하므로, 유사사태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대응 인력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할 것
- 일본 후쿠시마 오염 토양을 담은 자루가 태풍으로 유실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상청과 협조하여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 대응하여 자동 감시망을 설치할 것
- 우리나라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에 관하여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히 관리할 것
-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방재 훈련의 표준 운영 절차(SOP)가 비상 소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에 대

비하는 대비 태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것

- 북한 풍계리의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것
- 북한 핵실험 지역 주변의 방사능 오염 실태와 주민 피폭 실태에 대하여 남북 공동 조사를 검토할 것
- 북한 핵실험에 대하여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
-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전 주변 드론 출몰과 관련하여 대응 장비 구축, 관계 법령 개정, 긴급조치권 등 방재 대책을 마련할 것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호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을 실시할 것
- 원자력관계사업자 중 신고사용자의 건강진단, 피폭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등을 면제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 받지 않은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 원칙을 위반 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 등 이의 시정이 필요하므로 검토할 것
-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자들에 대한 준위별 안전장치 보급 의무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교육 횟수가 아닌 업무 경력에 따라 안전 관리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경력이 많은 종사자들은 안전 인식 및 업무 태도 개선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사선 작업 종사자 다수가 서울, 부산으로 이동해 교육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이미 수입된 모나자이트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방사능방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정 병원 및 보건소, 원자력사업장 등 특정 분야별 집중 훈련 대상으로부터 훈련 실시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점검할 것
- 방사선비상계획에서 한빛 원전이 있는 영광의 1인당 구호소 면적이 3.3m<sup>2</sup>인데, 다른 지역은 2.0m<sup>2</sup>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방사선 분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명확하

지 않으므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여 해결할 것

- 소규모 수도 시설 15,000개 중 73개 시설의 리터당 우라늄 수치가 법정 기준을 상회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정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방사성 가공·수입 업체 등록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탓에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공 제품이 수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예 기간의 축소를 검토할 것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2015년과 달리 2018년에 넵스(NAPS)를 비전략물자로 판정한 이유는 코팩이 2018년에는 민감도가 낮은 넵스의 ‘교육용 교재’를 제출하여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 판정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산하 기관에 사이버 보안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보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마련 등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라. 소속기관

### (1) 우정사업본부(19건)

- 우정사업본부 자체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것
- 해외 유전펀드 등에 대한 투자 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소포위탁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
- 총 파업 이후의 우편사업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년 7월 노사 합의에 따른 택배 인력 증원에 대하여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 노동 수칙의 준수·관리가 용이하도록 집배원 고용 형태 단순화 계획을 마련할 것
- 과로사 방지를 위하여 특별소통기간 내 물량 제한을 검토할 것
- 이륜차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재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
-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별정우체국의 세습 폐지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우정사업본부 중기 종합계획에 별정우체국 적자 해소 방안을 포함시킬 것
- 농어촌 지역에 발송되는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우편요금 감액률 조정을 최소화 할 것
- 집배원의 사상·순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
-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의 연간 배달 물량이 적정하도록 조정할 것
- 위탁 사업 공개 입찰 시 독점 구조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 독점 업체가 입찰을 앞두고 대표를 교차하는 행위와 같이 입찰을 교란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고객들이 휴면예금 계좌를 찾아가기 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인터넷 전문은행 직접 설립 또는 대주주 참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우체국보험의 위험(risk) 대응력을 높이고, 위험 관리자를 비롯한 주요 직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우정사업본부 보험 사업단의 주요 직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것

### (2) 국립중앙과학관(1건)

-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것

## 마.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 (1) 한국연구재단(19건)

- 노벨과학상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시 기관 홍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기초교양 교육에 대한 학술분류 체계 개정에 관하여 점검하고, 기초교양 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농업 부문의 생명공학 및 생물자원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내에 농학단을 설치할 것
- 향후 20~30년에 걸쳐 155만 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
- 기초연구사업 과제 종료 후 연구 단절률이 높은 상황에서, 재도약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연구자들의 실패를 용인하는 지원책을 검토할 것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노후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과학기술 R&D가 상용화 및 이익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 및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기획 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업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것
- 한국연구재단 제재조치평가단이 연구자의 불법행위를 부주의나 실수로 용인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미성년자의 공저자 및 제1저자 등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할 것
- 자격미달자의 논문 공동저자 참여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작성된 논문 전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 부실학회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신라젠 펙사백,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 및 환수할 것

- 한국연구재단의 감사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
- 감사원 핫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건비 유용 및 부당 집행 제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2) 한국과학창의재단(3건)

- 동일한 계약을 2,000만원 미만의 계약 2개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YTN 사이언스 채널 운영 시 본방송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과제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허위 여부 진단 및 실적 기재와 관련된 기준을 보완할 것

## (3) 한국과학기술원(17건)

- 4개 과학기술원 간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
- 4개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이사회 설치를 검토할 것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과 다른 과학기술원·대학·출연연구소·민간연구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할 것
-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운영 목적 및 지침 정비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반감사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위원회 구성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할 것
- 군사분야 인공지능 연구의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농업생명공학 및 농업생물자원 관련 연구를 확대할 것
- 소속 교수의 기업 사외이사 역임 시 견제·감시 등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도교수의 친족에 대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연구실 정보에 관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민간부문 종사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직 책임급의 채용자격 기준을 개선할 것

- 위촉연구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취업규칙을 구체화할 것
-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속 직원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언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것
-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인력 풀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1건)**

-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운용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할 것

####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1건)**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 시 수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 **(6)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3건)**

- 기관의 운영 목적 및 지침을 정비할 것
- 한국과학기술원의 일반감사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등 조치를 이행할 것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할 것

#### **(7) 광주과학기술원(6건)**

-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연구실 정보에 관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할 것
- 기술지주회사의 결손금 최소화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실험조교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고려하여 해고된 직원을 본래 직위로 복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 울산과학기술원(6건)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연구실 정보에 관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할 것
- 기술지주회사의 결손금 최소화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6건)

- 군 경력을 직무 분야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다른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연구실 정보에 관한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을 위하여 기초교양 교육을 강화한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할 것
- 기술지주회사의 결손금 최소화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0) 기초과학연구원(7건)

- 성희롱 사건 당시 기관의 조사 지연, 여성가족부 매뉴얼 이행 미흡 등 문제가 초래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연구원에게 사과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내부 임용규칙에 위배되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원 부설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연구단 신설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할 것
- 연구단에 대한 정보 보안 통제 대책을 강구할 것
- 직원 평가 시 노동조합 참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
- 중이온가속기 장치 구축 시 목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사업관리를 내실화할 것

#### (11) (기초과학연구원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1건)

- 산업수학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부설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4건)

- 강소특구의 성공을 위한 항공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 성과지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나, 특허출원의 성장세가 더디고 대덕특구의 침체가 눈에 띄게 드러나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특구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위탁 관리하는데, 이러한 이중 관리 체계로 인하여 혼선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도권을 갖고 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강소특구가 대덕의 기존 특구와 지원이 겹친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창의성 등 정성적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14) 한국원자력의학원(3건)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여 거동 불편자나 재해약자를 대상으로 약품 등을 미리 배포하는 정책에 관하여 검토할 것

-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비상약품에 대한 지방 분산 배치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검토할 것
-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핵 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피폭 관련 전수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등을 검토할 것

#### (15) 국립광주과학관(1건)

-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심사표에 대상자의 가점을 미리 기입하는 등 인사 비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근절할 것

#### (16) 국립부산과학관(2건)

- 임직원의 지인이 독점하여 과학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기업체 등과의 행사 개최 시 해당 업체와 대여료를 분담하는 등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

#### (17) 한국나노기술원(2건)

- 원장이 현직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
- 특허출원건수를 제고하는 등 성과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18)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4건)

- 사업화 실적, 창업지원, 일자리창출의 역할에 비해 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 사업은 3년 한시 사업으로 내년에 종료되므로, 지속적인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육성을 위하여 후속 사업을 기획할 것
- 실험실 창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윈스톱 실험실 창업 사전 기획 사업 등이 필요하므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창업 전담 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

### (19)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1건)

- 사업 추진 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48건)

- 주요 직위나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관 규정을 유예기간을 두 고서라도 조속히 시행할 것
- 부실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자 집단이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른 전담 인력이 미비한 출연(연)이 다수이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진 석박사 채용 사업의 월급 상납 문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력할 것
-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 강화 및 협업과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가칭 기술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
- 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연(연)의 통폐합·단일법인화 등을 검토할 것
- 출연(연) 분원의 과도한 설치로 인하여 특구의 기능이 분산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지역 조직 평가를 거쳐서 통폐합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
- 기초과학연구원과 과기정통부의 직할 연구기관이나 출연(연) 간에 연구개발 분야의 중복이 있으므로 기초과학연구원의 기능을 출연(연)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할 것
- 출연(연)이 향후 닦칠 수 있는 기술 종속의 위험(risk)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출연(연)이 고유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정립할 것
-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제품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제품 개발까지 요구 수준에 맞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된 5대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산업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실안전법, 연구개발특구법)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출연(연) 예산의 출연금 비중을 예산의 50% 이상으로 높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 국가 연구개발(R&D) 공고 시점을 다양화하고, 협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다년도 연구 시에는 승인 없이도 연구비를 선집행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경직성 해소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본의 조정금 연구비 지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
- 출연(연)의 인건비 충당이나 기관별 R&R(Role and Responsibility) 추진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재원 마련을 요구할 것
- 출연(연)에서 정립된 기관별 R&R(Role and Responsibility)을 어떻게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
- 안정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서 연구 성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commercialization) 및 이익(profit) 창출 등 성과확산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금 및 인력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 지원이 없는 경우에 활동 지시의 철회나 활동을 위한 출연금 배정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의 경우에 기존 수행 업무 외 추가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충분한 지원과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 고령화 사회 대비 및 국내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서 치의과학 관련 출연(연) 설립을 검토할 것
- 스마트팜 같은 신기술을 포함한 농어업 연구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것
- 출연(연)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출연(연)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출연(연) 우수 인력의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65세 정년 환원,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젊은 연령대의 연구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
- 출연(연) 정년이 61세로 낮아진 상태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임금만 삭감된 셈이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출연(연)의 연구개발직을 대상

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
- 출연(연) 파견노동자의 전환률이 현재 저조한 상황이므로, 대상 근로자의 전환률을 높이는 등 정책 취지에 맞게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
- 일부 출연(연)의 노사협의기구 구성과 운영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많으므로, 대다수 용역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자 대표 선정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므로, 모든 출연(연)이 노사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수의 출연(연)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3.2%를 하회하므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 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 효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므로 연구 지원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과학기술인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출연(연) 대상 어린이집 설치,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 중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할 것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출연(연) 차원의 참가제한리스트 또는 부실학회 참가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
- 출연(연)이 부실학회 사태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환수금 회수를 위한 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
- 중단된 연구 과제에 대하여 참여 기회 제한이나 연구비 회수와 같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관리 수단을 검토할 것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의 해외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전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미활용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
-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4차 산업혁명과 융합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하에서 행정보조요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특정 팀이 아닌 기관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출연(연)의 감사에 대한 확인서·처분요구서·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부서 경력자

를 협동 감사인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협동 감사인이 감사에만 전념하기 위하여, 원소속기관과 활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동감사인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무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통합 감사 제도와 감사 전문직화에 관하여 발의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통합 감사 제도는 출연(연)의 기존 감사의 전문성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부 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므로 도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

#### (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2건)

-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것

#### (22) 한국생명공학연구원(1건)

- 영장류자원지원센터 내 인수 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충·방서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건)

- 과학기술사이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R&D 연구자 데이터 관리 플랫폼 운영 시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플랫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8건)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시행계획·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
- 위성통합운영시스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과의 양도 관련 사안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놓을 것
- 차기 통신 위성 국산화 차원에서 천리안 1호의 대체 위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준비할 것
-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기술 검토 의견을

보이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설득할 것

-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향후 원장·단장의 은폐행위가 드러난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원장을 비롯한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저비용 소형 발사체 개발과 초소형·소형 위성 발사의 추진을 검토할 것
-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 정부기관의 통합된 재난현장 상황 종합분석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적 예외 법적기준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

#### (25) 한국원자력연구원(7건)

- 연구소기업 콜마비엔에이치의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주로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빈발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초고온 가스는 싼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추가되는 경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것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민간 투자를 받아 연구개발(R&D)을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내 구성원과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준비할 것
-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의 핵종 분석 오류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상이하므로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을 발생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2건)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가 예산으로 지어진 시설을 위탁 경영하는 경우에 공모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평가 기준이나 배점 등을 공개하고, 위탁경영 기업들을 선정할 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것

**(27) 한국전자통신연구원(5건)**

- 5G 네트워크 보안 관련 연구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것
- 버스에서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가 작동이 안 되어 5G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SW) 또는 알파고에 한정된 개념으로 알려져 하드웨어(HW)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공지능(AI)과 하드웨어(HW)의 동반 성장 방안을 부각시킬 것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국가 거대 연구개발(R&D)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8) 한국건설기술연구원(1건)**

- 생활안전·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의 경우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2건)**

- 디젤 노후차량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소철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건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0) 한국식품연구원(1건)**

- 생활안전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만큼은 현장의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1) (한국식품연구소부설)세계김치연구소(1건)**

- 김치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우리 고유의 김치 맛을 규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김치 표준화에 대하여 연구할 것

**(32) 한국지질자원연구원(2건)**

- 포항 지열 지진의 원인에 대하여 정부 조사단의 발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북한 핵실험을 원인으로 하는 지진·지하수 오염·해양 오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검토할 것

**(33) 한국기계연구원(1건)**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34)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1건)**

- 소재·부품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설계, 인력 확보,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건)**

-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과 같은 왜곡된 사실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할 것

**(36) 정보통신산업진흥원(14건)**

- ‘무선주파수인식(RFID)/스마트센싱 확산사업’ 관련 담당자 부정사용·횡령 사건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심 준비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 식당 운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최소 50%이상 지역 농산품·물품을 사용할 것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체 징계요령의 징계 소멸시효가 2년인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의 기간인 3년에 비하여 짧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공개소프트웨어활성화지원 사업에서 개방형 운영 체제(OS) 개발·보급 과제와 산업별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같은 핵심 분야의 신규 인력 양성 규모를 늘릴 것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물인터넷(IoT) 기술 지원 센터의 국제 표준 기반 시험 인증 서

비스 실적을 제고할 것

-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닥터 앤서’가 시범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허가, 규제, 예산 문제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상현실(VR) 관련 예산 확보와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대규모 과제를 선도할 것
-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역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제작거점센터’ 제도의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주 가상현실체험관의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 기업 맞춤형 역량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진행할 것
- 중소기업 인력을 교육하거나 파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 (37) 한국인터넷진흥원(39건)

- 이월이 가능한 자체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단기적으로 지역 물품 및 구매업체 비중을 절반 이상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도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
- 금융 기관·보험 협회 등과 논의하여 중소기업 피해 완화를 위한 사이버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
- 공공기관에서 보안 적합성 검사 없이 도입한 제품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업용 제품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
-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위변조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
- 사물인터넷(IoT) 제품,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보안위협 분석 및 보호대책 마련할 것
-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네트워크 개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개된 취약점 포함 여부 점검 범위에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음성 명령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할 것
- 방송통신 국제협력 출연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여 업무를 재조정할 것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강제성 있는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입법 등의 방안을

## 검토할 것

- 악성 애플리케이션과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공조할 것
- 국내 판매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하여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
- 무선 백도어 공격에 대한 감지·방어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의 제도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할 것
-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보안 위협에 대응할 필요
- 북한 소행의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이버침해 대응과 분석, 정보공유 등 기능의 범위를 고도화 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
-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탐지·삭제할 것
- 구글에게 네이버 계정 판매 게시글을 검색 결과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할 것
- 불법 계정 판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별정통신사가 음성전화 발신번호 변작 검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할 것
- 중소기업에서도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것
- 장기 미사용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제 조치를 검토할 것
- 개인정보 유출 및 위조 여권에의 악용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에 건의하여 외교부 등 범부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할 것
-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 싸이월드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므로 이를 점검할 것
- 정보보호 공시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의 보안 취약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더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대 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보보호 현장의 인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을 교육하거나 파견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
-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과 제도 활성화에 있어서 중소기업 인증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마련할 것
- 액티브X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통하여 국내 인터넷 환경을 국제 표준에 맞춰 신속히 개선할 것
-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과기정통부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준비하는 등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샵메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락처 계획을 마련할 것
- 공인전자문서 중계서비스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정보 보안관련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할 것
- 이파이 위치 기반 서비스(LBSP)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기준이 미비하므로 제도화할 것

### **(3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건)**

- 향후 도입 예정인 5G 송신기의 주파수 28GHz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홍보할 것
- 현재 성인과 아동 전자파 안전 기준이 같은데 일각에서 이것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39) 한국정보화진흥원(21건)**

- 전 직원이 폭력과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국가정보화백서에 오기·오류가 존재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및 개선할 것
- 90일 미만의 연구 용역 등 타 기관보다 기간이 짧은 과제가 많으므로 계획에 대해 점검할 것
- 중소 통신공사업자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참여 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

를 점검할 것

- 통신 품질 평가의 정확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손말이음센터의 원활한 통신중계사 채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보화 교육을 검토할 것
- 노인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키오스크·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편의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도록 노력할 것
- 취업 등을 위한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것
- 예산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이 인공지능(AI)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보급, 교육 등을 할 것
- 웹 접근성 실태 조사 점수가 낮은 교육기관과 50개의 공사 등에 대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하여 점검할 것
- 웹 접근성이 좋은 민간 기업에 대하여 인증이나 포상 제도를 도입할 것
-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확산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성인 대상의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
- 인터넷 윤리 교육 수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0~2세의 영·유아에 대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상담 실적을 제고할 것
- 콘텐츠 이용 형태·중독 유형별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 스마트 쉽 센터의 예산을 마련해서 전문 상담인력 증가에 힘쓰고 부모에 대한 홍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

#### (4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2건)

- 공무원과 차등적인 내부규정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고 향후 계정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신규채용 절차 오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 생산품 사용 및 지역 소재업체 이용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거래소 개설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작년 대비 대폭 증액된 데이터 바우처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점검할 것
-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공개 모집 결과가 저조하므로 개선할 것
-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쿼터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것
-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 교육 및 파견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 빅데이터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검토할 것
- 민간데이터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하여 책임기관 ‘데이터 표준원’ 설치나 데이터 표준화 관리와 같은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민간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것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DB-Stars 사업)이 인기가 있음에도 예산이 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

#### (4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8건)

- 연수원의 이용 행태 변화나 수요 감소에 맞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
- 광고 운행 불일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광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한 편이므로 지방 교육을 확대하고 상설화 할 것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방송사의 공익광고 송출시간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광고의 온라인 송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연중 상시에 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에 규모가 크거나 외국 자본이 들어온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것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과정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42) 시청자미디어재단(1건)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어린이 실시간영상재생(OTT) 콘텐츠의 프리롤(pre-roll) 광고 앞에

어린이 시청 안내 광고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건)**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한국의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다른 전문기관의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오염수 방류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할 것

**(4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1건)**

-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이버 보안 특별 점검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점검 계획서를 마련하여 제출할 것

**(46) 한국원자력안전재단(8건)**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법률 검토 용역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미활용과 수의계약 금액 한도 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할 것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비상근 감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측 소송대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직 윤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검토할 것
- 생활 방사능 물질로서 북한 풍계리의 방사능 물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 방사선 안전교육, 업종별 교육 외에 교육생 수준별 특성과 선호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5년 4월에 서비스 거부 공격(DDos)을 받고 2019년 5월에 발견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중국 정부에게 중국 원전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
-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교육 횟수가 아닌 업무 경력에 따라 안전 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교육 과정에서 예산·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형식적인 연1회 교육보다 내실과 전문성·실효성을 갖춘 2년1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7) 한국수력원자력(주)(25건)

- 한국수력원자력의 순환보직제 도입에 대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
- 원전 운영은 안전이 우선시되는 작업이므로, 일선 관계자 배치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을 우선한 인사를 실시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 직원보다 위험의 강도가 높고 피폭량이 많은 외주 직원에게 위험수당 등을 활용해서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운영과 관련하여 외주화를 줄이도록 할 것
- 월성 원전의 기술 규격이나 규정이 오래되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발전소 핵심인력 가운데 관련 노형 면허 보유율이 51%에 불과하므로 요건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
-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검토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투자와 관련하여 그 경제성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
-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그 적절성을 검토할 것
- 원전 건설 관련 업체가 원전 해체 산업을 이어받으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검토할 것
-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속히 결정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이 빠른 시일 내로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를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월성 3호기 핵심 설비인 습분분리기의 점검 주기가 10년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검사 기준을 개선·확립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임계 승인을 해준 것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 재개로 표현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언론 대응에 유의할 것
- 제어실 내 CCTV가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서 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책을 수립할 것
- 현대건설의 한빛 3·4호기 점검·보수 비용 자체 부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서면 계약을 확보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에서 구체적인 한빛 3·4호기 보수 계획을 수립할 것
- 원자력 발전소 부실 시공의 보상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

부에 절차적 방안을 건의할 것

- 불법 드론 공격과 관련하여 피해 방지 및 대응장비 구축,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법령 개선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권한 확보 및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PC 운영체제(OS) 교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책 마련 필요
-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 관련 전문 인력 확충, 보안 교육 강화 등 사이버 보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북한 등 특정국가에서 시도한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조사·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 발전소 간에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서로 협력하고 암스트롱(ARMstrong) 로봇 같은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원전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계획예방 정비가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이 계획예방 정비를 철저히 진행할 것

## 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1) 과학기술인공제회(1건)

- 신뢰성이 높지 않은 신생회사와 일본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500억 원 규모의 출자 약정을 체결한 것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1건)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다른 일자에 실시할 것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15건)

- 투표형 프로그램의 조작 가능성·의혹 개연성에 대하여 조사할 것
- 투표형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 101에서 투표 조작이 발생한 사실이 경찰로부터 공개됐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재방송·방송사 다시보기·유튜브 등으로 유포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치할 것
-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노동권·인권 관련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1인 방송 등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
-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튜브 등을 통한 외국인 여성 결혼 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어린이 실시간영상재생(OTT) 콘텐츠의 프리롤(pre-roll) 광고 앞에 어린이 시청 안내 광고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해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튜브의 시정 요구 이행률이 16.5%로 낮으므로, 국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불법 정보 유통의 시정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
-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약, 음란물 등의 불법 정보가 다크 웹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접속 또한 계속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하여 삭제나 접속 차단뿐 아니라 상습 게시자들에 대한 계정 이용 해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변조 및 무허가 불법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서 시정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
-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총기 판매나 폭발물 제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불법 무기 사용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시정요구 조치 등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 노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범람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차단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것

#### (4) 한국방송공사(24건)

##### <기관 운영 및 수신료 관련: 10건>

- 이사회 운영 규정에 보조 동의안 규정과 의사진행발언 1회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소수 의견을 차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을 검토할 것
- 모스크바 특파원의 공금 횡령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징계 문제를 다룰 때 소속된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은 지양할 것
- 여성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한 성평등 기본규정을 시행하고 성평등 센터를 활성화시킬 것
- 50대 이상의 여성 앵커에게 메인 앵커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정 직군에 특정 성별·연령이 집중되는 인적 구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영국방송공사(BBC)의 정치수석고문(chief adviser politics)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것
- 한국방송공사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론 본연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보 보호 조직을 점검하고 고출력전자기파(EMP)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개선할 것
- 전기 요금을 체납하는 약 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체납 가산금까지 받는 것은 가혹한 조치이므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것
-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공탁 기간 10년이 끝났으므로 공탁금의 국고 귀속을 검토할 것

## <방송정책 일반: 14건>

- 비상 경영 계획에 따라 지역국의 기능을 광역 거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국을 광역 총국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면 재난 방송의 기능 발휘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재난 보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검토 후 시정할 것
-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 협찬금 부담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평일 23시대에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은 광고 수익을 포기하는 행태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재검토할 것
- 국민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제2TV의 대화와 희열을 제1TV에서 4회 재방송하면서 간접광고(PPL)가 노출된 것은 광고 반납 선언의 위반인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 반납 선언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외주 제작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점검할 것
- 외부 제작사에게 관행적으로 20%의 부당한 간접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드라마가 한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상 경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드라마를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할 것
- 보이스피싱은 노인·청년·서민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절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과 같은 캠페인을 방송을 통해 실시할 것
-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제작해서 송출하는 대신 대다수 시청자가 이용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UHD 방송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HD 방송에서 나오는 UHD 자막을 지워 시청자의 오인을 방지할 것
- 한국방송공사가 지상파 방송사 재송신 비용(CPS)을 인상하려는 계획은 종합 유선 방송(SO)에게 부담이 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할 것

## (5) 한국교육방송공사(14건)

### <기관 운영 및 교육교재 관련: 3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속기록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개선 필요
- 대입 준비 시기가 빨라진 경향이 있으므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중학생 대상 서비스·콘텐츠를 강화할 것
-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사용해서 오타를 교정하여 수능 연계 교재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송정책 일반: 11건>

- 적자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채널방송(MMS)인 2TV를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직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거쳐 정치 편향 요소를 일체 배제하는 쇄신을 시도할 것
- 농촌이나 군 단위 지역에서 모여라 당동맹·입시설명회 같은 인기 있는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
- 불편부당성을 견지하고, 평생 교육의 교재로서 다큐멘터리를 적극적으로 제작할 것
- 스마트 수어 방송 플랫폼에서 빠져 있으므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실시할 것
- 지식채널e가 북한 홍보 방송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다문화 고부 열전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 한국교육방송공사 뉴스가 교육 이외의 정부 국정 운영을 홍보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프로듀서(PD) 상당수가 보직이나 기획 관리에 종사하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외주 프로듀서(PD)가 41명이나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작 인력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
- 급변하는 사교육 시장의 흐름이나 유튜브 교육 부문에서 순위가 높은 스위트티비 등을 참고하여 코딩 교육 같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

- 유튜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작한 유아 프로그램 콘텐츠에 부적절한 대출·게임 광고가 게재되고 있으므로 구글에 시정을 요구할 것

## (6) 방송문화진흥회(15건)

- 전주와 목포 미디어 센터가 폐쇄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 예산도 축소되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것
- 매 정권마다 MBC의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므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구조 개편 등 쇄신 방안을 검토할 것
- MBC가 재난 방송 편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점검을 실시할 것
- MBC의 방송 실시결과보고서에 재방송을 본방송으로 보고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방송문화진흥회가 검토를 실시할 것
- MBC의 재방송 비율을 낮추고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MBC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때 방송문화진흥회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불편부당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MBC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양주 MBC 문화동산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주연급 배우에게 사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할 것
- MBC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재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MBC 이사회에 지역 인사가 참여하고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역 MBC가 재정 상황이 어려우므로 전과료 배분 수입 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MBC의 호봉제 전환이 조직 화합·안정에 기여했지만 우수 인력 관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 MBC 경영 개선을 위해 과감한 통폐합이나 구조 개혁을 감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
- MBC가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제작해서 송출하

는 대신 대다수 시청자가 이용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통해서 UHD 방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MBC의 애플리케이션 12개 가운데 6개가 거의 활성화돼 있지 않으므로 점검을 실시  
할 것

## 8. 기타사항

### 가. 일반증인 · 참고인 출석현황

출석일	출석기관 (출석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등)
10. 2. (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국회)	한성숙	일반증인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 국내·외 CP 역차별 및 규제형 평성 관련	출석	
		여민수	일반증인	키카오 공동대표이사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 국내·외 CP 역차별 및 규제형 평성 관련	출석	
		김효중	일반증인	그린웹서비스 대표	- 네이버인공지능(AI)스피커 대 화 녹음 의혹 관련	출석	
		전종희	일반증인	코인제스트 대표	- 암호화폐 출금 지연 문제 관련	출석	
		문용식	일반증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버스 와이파이 사업 등 관련	출석	
		박윤영	일반증인	KT 기업사업부문장	- 버스 와이파이 사업 등 관련	출석	
		박준훈	일반증인	대구지방조달청장	- 버스 와이파이 사업 등 관련	출석	
		서재성	일반증인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	- 버스 와이파이 사업 관련	불출석	- 주소지 불명 - 일부출석(10. 15.)
		조윤성	일반증인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 버스 와이파이 사업 관련	불출석	- 주소지 불명 - 일부출석(10. 15.)
10. 4. (금)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강종렬	일반증인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 센터장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 5G 망 투자 관련 - 5G 관련 불법보조금 지급, 서 비스 및 콘텐츠 품질 관련 - 국내·외 CP 망 이용대가 차별 관련 - '한일경제전쟁'에서 일본에 경 쟁력이 있는 5G 장비/서비스 등에 대한 육성 정책 관련	출석	
		오성목	일반증인	KT 사장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 5G 망 투자 관련 - 5G 관련 불법보조금 지급, 서 비스 및 콘텐츠 품질 관련 - 국내·외 CP 망 이용대가 차별 관련 - '한일경제전쟁'에서 일본에 경	출석	

출석일	출석기관 (출석장소)	성 명	구 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 고 (불출석 사유 등)
					쟁력이 있는 5G 장비/서비스 등에 대한 육성 정책 관련		
		최택진	일반증인	LG유플러스 부사장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 5G 망 투자 관련 - 5G 관련 불법보조금 지급, 서비스 및 콘텐츠 품질 관련 - 국내·외 CP 망 이용대가 차별 관련 - ‘한일경제전쟁’에서 일본에 경쟁력이 있는 5G 장비/서비스 등에 대한 육성 정책 관련	출석	
		존 리	일반증인	구글코리아 대표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 허위조작정보(역사왜곡 등) 및 혐한 콘텐츠 유통 및 광고 송출 관련 - 유튜브 아동권리 침해 관련 - 시스피커 개인정보 무단수집 관련 - 망사용료 분쟁 및 매출 공개, 글로벌 CP 역차별 관련	출석	
		정기현	일반증인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 방통위의 과징금, 시정요구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관련 - 망 이용대가 관련	출석	
		서민석	일반증인	조블페이 대표	- 별풍선 사태 관련	출석	
		윤 구	일반증인	애플코리아 대표	- 소비자 보호 문제 관련 - AS 대리점 갑질 관련	출석	
		레지널드 손 통슨	일반증인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대표	- 다국적 IT기업의 국내영업 형태 및 구글세 도입 관련	불출석	- 국외 체류
		박태훈	참고인	주식회사 왓챠 대표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출석	
		최성진	참고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망 사용료 실태 관련	출석	

출석일	출석기관 (출석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등)
		방효창	참고인	경제정의시민실천 연합 정보통신위원장	- 통신3사 망 이용대가 불공정거 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 련	출석	
		이태현	참고인	Wave 대표이사	- OTT규제 관련	불출석	- 병원 입원
10. 7. (월)	원자력안전위원회등 (국회)	전취수	일반증인	쥬한국수력원자력 기술총괄부사장	- 업무 전반	불출석	-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배석
		김익중	참고인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 및 에너지 전환정책 필요성 관련	불출석	- 개인 사정
		민병주	참고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탈원전 정책 관련	불출석	- 국내 출장
10. 10. (목)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등 (국회)	이승훈	일반증인	랜턴A&I 대표	- 일본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출석	
		김여정	참고인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연구원	- 카이스트 위촉직 정규직 전환 관련	출석	
10. 15. (화)	정보통신산업진 흥원 등 (국회)	서재성	일반증인	피엔피플러스 대표이사	- 버스 와이파이 사업 관련	출석	- 일부출석 (10. 2. 불출석)
		조운성	일반증인	피엔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 버스 와이파이 사업 관련	출석	- 일부출석 (10. 2. 불출석)
		이희성	일반증인	한국레노버 대표이사	-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출석	
10. 17. (목)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 사 (국회)	홍사훈	일반증인	한국방송공사 전 시사제작국장	- 언론 자유 등 관련	출석	
		정상문	참고인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 KBS 적자, 편파방송, 외압의혹 문제 등 관련	출석	
		이경호	참고인	한국방송공사 언론노조 위원장	- KBS 적자, 편파방송, 외압의혹 문제 등 관련	출석	

출석일	출석기관 (출석장소)	성명	구분	직업 및 직위	신문요지 (감정사항)	출석 여부	비고 (불출석 사유 등)
10. 18. (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 (국회)	문건	일반증인	한국오라클 대표이사	- 다국적 IT기업의 국내영업 형태 및 구글세 도입 관련	출석	
		명사오원	일반증인	한국화웨이 지사장	- 보안 이슈 등 관련	출석	
		조순용	일반증인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	- 연계편성, 실시간 방송 금지, 판매수수료율, 송출수수료 등 관련	출석	
10. 21. (월)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 (국회)	송진섭	일반증인	현대건설 전무	- 한빛 1,2,3,4,5,6호기 공급, 부실시공 등 관련	출석	
		정재훈	일반증인	주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업무 전반	불출석	- WANO 런던본부 이사회 및 격년총회 - 일부출석 (10. 7. 출석)
		이강택	참고인	tbs교통방송 대표	- 방송중립성, 김어준 뉴스공장 편파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 운영의 위법성, tbs 독립법인화 문제 등	출석	

## 나.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요지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10. 2.	문용식 한국정보화 진흥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크래프트가 버스 와이파이 국정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국회나 정부 측의 연락·접촉이 있었는지</li> <li>○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출연사업 수행계획서에서 1차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내 광고 수익 모델이 2차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li> </ul>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을 조작하거나 일부 자동검색어를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실이 있는지</li> <li>○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조작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구글처럼 실시간 검색어 자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입장인지</li> <li>○ 네이버 시스템에서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인 실시간 검색어 이용 패턴을 확인한 경우가 있는지</li> <li>○ 편향적인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아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지</li> <li>○ 네이버가 포털상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적인 개입에 대해 업무방해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li> <li>○ 네이버가 댓글·뉴스 인링크·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폐지할 의사가 있는지</li> <li>○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의심스러워서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네이버가 바로 이를 삭제할 의사가 있는지</li> <li>○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li> <li>○ 네이버도 카카오처럼 인공지능(AI) 스피커 이용자에게 음성데이터의 수집·삭제에 대한 프라이버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li> <li>○ 네이버 뉴스 페이지의 광고 수익이 얼마인지</li> <li>○ 증인이 회장으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과기정통부·방통위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p>가 무엇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li> <li>○ 네이버가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li> <li>○ 토스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의도적인 업무방해라고 생각하는지</li> <li>○ 포털사 직원이 정계로 진출하려면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해야 하는 것과 같은 내부 윤리규정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li> <li>○ 네이버가 2019. 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로부터 부친과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li> <li>○ 지방화·분권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네이버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사가 많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li> <li>○ 네이버가 메인 화면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li> <li>○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음성명령 플랫폼과 이와 관련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및 관련 웹 서비스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 인증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어떠한지</li> <li>○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스피커 이용자들에게 ‘품질 개선을 위한 음성 수집’이나 ‘음성데이터 삭제’ 선택권 같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이 기능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li> <li>○ 인공지능(AI) 음성명령 플랫폼 및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네이버의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의 보안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p>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향적인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것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으로 보는지</li> <li>○ 카카오의 실시간 검색어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할 수 있는지</li> <li>○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어 조작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구글처럼 실시간 검색어 자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입장인지</li> <li>○ 실시간 검색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li> <li>○ 카카오 시스템에서 기계적 개입에 의한 비정상적인 실시간 검색어 이용 패턴을 확인한 경우가 있는지</li> <li>○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어 의혹에 관하여 선관위,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과 논의하는 방안이 동의하는지</li> <li>○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스피커 휴먼리뷰율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li> <li>○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스피커 이용자들에게 ‘품질 개선을 위한 음성 수집’이나 ‘음성데이터 삭제’ 선택권 같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이 기능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li> <li>○ 인공지능(AI) 음성명령 플랫폼 및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카카오의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의 보안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li> <li>○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음성명령 플랫폼과 이와 관련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및 관련 웹 서비스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 인증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어떠한지</li> <li>○ 다음 뉴스 페이지의 광고 수익이 얼마인지</li> <li>○ 카카오가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웃링크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인이 부회장으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과기정통부·방통위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li> <li>○ 카카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li> <li>○ 연예인 팬클럽이 키워드 검색 참여를 통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는지</li> <li>○ 카카오가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li> <li>○ 포털사 직원이 정계로 진출하려면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해야 하는 것과 같은 내부 윤리규정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li> <li>○ 지방화·분권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뉴스에서 지역 언론사가 많이 배제된 이유는</li> </ul>
	김효중 그린웹서비스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웹서비스의 휴면리뷰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li> <li>○ 그린웹서비스가 직원 교육, 시스템 차단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li> <li>○ 보안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 그린웹서비스가 신속하게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지</li> </ul>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인제스트가 기획파산·청산 없이 고객에 대한 출금을 개시할 것인지</li> <li>○ 코인제스트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는지</li> </ul>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크라프트가 버스 와이파이 국정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국회나 정부 측의 연락·접촉이 있었는지</li> </ul>
	박준훈 대구지방조달 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물자 구매입찰 긴급 공고에서 입찰 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낮춘 것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제안요청서(RFP)에 따른 것인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10. 4.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 터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텔레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 개선 필요</li> <li>○ 인터넷 해지가 어렵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SK브로드밴드의 문제 개선 필요</li> <li>○ 저가요금제에도 상당한 데이터가 주어지도록 SK텔레콤의 요금제 재설계 필요</li> <li>○ 화웨이의 5G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li> <li>○ T브로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내부 노동 문제에 대한 SK텔레콤의 신중한 협의 진행 필요</li> <li>○ 5G 상용화를 위해서 SK텔레콤의 국회·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기지국 설치 지원 요청 필요</li> <li>○ 5G 서비스 출시로 다시 극심해진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동통신사의 자정 노력 필요</li> <li>○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규모·국적별로 망 사용료의 기준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li> </ul>
	오성목 KT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민주화운동과 일본 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악성 광고 영상이 KT에 나오는데 그 역사인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li> <li>○ KT와 구글 사이에서 망 사용에 대하여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li> <li>○ 저가요금제에도 상당한 데이터가 주어지도록 KT의 요금제 재설계 필요</li> <li>○ 화웨이의 5G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li> <li>○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에서 주문형 비디오(VOD)를 구입했음에도 트리거 광고가 나오는 것이 KT의 시청자에 대한 시청권 침해가 아닌지</li> <li>○ 5G 상용화를 위해서 KT의 국회·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기지국 설치 지원 요청 필요</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서비스 출시로 다시 극심해진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동통신사의 자정 노력 필요</li> <li>○ KT가 망 사용료가 내려가지 않음에도 줄어든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li> <li>○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규모·국적별로 망 사용료의 기준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민주화운동과 일본 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악성 광고 영상이 LG유플러스에 나오는데 그 역사인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li> <li>○ LG유플러스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 개선 필요</li> <li>○ 저가요금제에도 상당한 데이터가 주어지도록 LG유플러스의 요금제 재설계 필요</li> <li>○ 화웨이의 5G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li> <li>○ LG유플러스의 독도 5G 기지국 설치 필요</li> <li>○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사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LG유플러스의 강력한 대처 필요</li> <li>○ 고객센터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LG유플러스, 노동조합, 인수 대상 업체 간의 긴밀한 협이 필요</li> <li>○ 5G 상용화를 위해서 LG유플러스의 국회·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기지국 설치 지원 요청 필요</li> <li>○ 예전에는 여러 개의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주문형 비디오(VOD)를 한 TV에서 구입하면 같은 가정에서 같이 시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불가능한지</li> <li>○ 5G 서비스 출시로 다시 극심해진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동통신사의 자정 노력 필요</li> <li>○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규모·국적별로 망 사용료의 기준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p style="text-align: center;">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튜브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나 민감한 사건에 대해 노란딱지를 붙여서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지</li> <li>○ 유튜브의 인공지능(AI)이 노란딱지를 붙일 때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li> <li>○ 유튜브에서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행동에 의하여 노란딱지가 붙은 상황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이때의 권리구제 방안이 무엇인지</li> <li>○ 유튜브에서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행동에 의하여 노란딱지가 붙는 것이 표현의 자유·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침해 소지를 갖는지</li> <li>○ 유튜브의 노란딱지 규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예측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지</li> <li>○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사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li> <li>○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대리인 지정 및 운영 필요</li>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불법·유해정보 가운데 구글이 자체 심의를 통해서 삭제한 비율이 국내사업자에 비해서 크게 낮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li> <li>○ 구글이 자신의 트래픽 사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통신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li> <li>○ KT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망 사업자와 협력하겠다는 증언이 위증이 아닌지</li> <li>○ 프랑스 정부가 지적한 개인정보 약관 포괄적 동의의 문제를 개선하고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구글이 성실하게 납부할 것인지</li> <li>○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를 구글이 성실하게 납부할 것인지</li> <li>○ 한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면 구글이 성실하게 납부할 것인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이 특정 정치세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신을 지킬 것 인지</li> <li>○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는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의 알고리즘 보완·개선 필요</li> <li>○ 구글이 콘텐츠를 삭제할 때 불명확한 자체 가이드라인 대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불법정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지</li> <li>○ 구글이 독일에서 신고된 영상물을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삭제하는 것이 독일 소셜네트워크법의 존재 때문인지</li> <li>○ 구글이 유발하는 트래픽에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li> <li>○ 구글이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실이나 반대 의견을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해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li> <li>○ 구글 측 증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 개선 필요</li> </ul>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 임의 변경 사건에 따른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li> </ul>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블페이의 대리 결제를 이용하여 아프리카TV에서 결제 한도를 넘겨 별풍선 120만 개(약 1억2천만 원 상당)를 구입한 시청자가 있는데, 조블페이와 아프리카TV 간의 내부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li> <li>○ 아프리카TV의 결제 한도가 100만 원인데 조블페이가 어떻게 결제 한도를 넘겨 별풍선 120만 개(약 1억2천만 원 상당)를 구입했는지</li> <li>○ 아프리카TV의 결제 한도가 100만 원인데 조블페이가 결제 한도를 넘겨 별풍선 120만 개(약 1억2천만 원 상당)를 대리 결제 또는 우회 결제한 것이 아닌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 관련 민원 해결 및 외주 서비스 센터 품질 개선 필요</li> <li>○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센터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li> <li>○ 애플이 디지털 콘텐츠의 인 앱 결제를 강제해서 아이폰 이용자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구글처럼 앱 외부 결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 마련 필요</li> <li>○ 통신 3사가 2016년까지 1,730억 원을 애플 광고비로 부담했는데 애플이 이런 행태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li> <li>○ 애플이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계약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지</li> </ul>
10. 10.	이승훈 랜턴A&I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의 주관사인 랜턴A&amp;I가 2017년 과학기술인공제회의 500억 원 투자 약정을 받기에 앞서 어떤 경로를 통해 공제회와 접촉했는지</li> <li>○ 일본의 「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고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요금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랜턴A&amp;I가 일본 태양광 투자의 편익비용분석을 다시 실시할 것인지</li> <li>○ 랜턴A&amp;I가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과 일본 태양광 투자를 모두 진행할 계획인지</li> <li>○ 랜턴A&amp;I가 주관하는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두산이 소유한 170만 평의 초지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의 소명 요구 이후에 사업부지로 전용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부적절</li> </ul>
10. 15.	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한국레노버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li> <li>○ 한국레노버가 중국 정부, 중국과학원, 레노버의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p>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앤피플러스가 명백히 손실을 봄에도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li> <li>○ 피앤피플러스가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음에도 기술 부적합을 이유로 탈락한 것에 대하여 수궁하는지</li> <li>○ 피앤피플러스가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면서 광고 모델을 이용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li> <li>○ 피앤피플러스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권한을 얻은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모델을 계획한 것인지</li> <li>○ 피앤피플러스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에게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사전 정보를 얻거나 면담을 한 적이 있는지</li> <li>○ 여당 중진 의원실 출신 보좌관들이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하여 로비를 했다는 것을 피앤피플러스가 인지하고 있었는지</li> <li>○ 2015년경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가 당시 익성 상장준비팀의 조범동을 사업상 접촉했을 때 어떠한 요구를 받았는지</li> <li>○ 피앤피플러스가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지</li> </ul>
	<p>조운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를 사직하고 피앤피플러스의 홍보 담당으로 이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li> <li>○ 피앤피플러스가 원래 와이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지</li> <li>○ KT가 LTE 브릿지를 제공했다면 피앤피플러스와 메가크래프트가 혼잡도 극복하는 일반 범용 와이파이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10. 17.	홍사훈 한국방송공사 전 시사제작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사훈 전 한국방송공사 시사제작국장이 시사기획 창 의 태양광 관련 탐사 보도의 재방송 보류 당시 입장문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li> <li>○ 홍사훈 전 한국방송공사 시사제작국장이 시사기획 창 의 태양광 관련 탐사 보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취재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li> <li>○ 시사기획 창 의 태양광 관련 탐사 보도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기하도록 분명하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li> </ul>
10. 18.	조순용 한국TV홈쇼 핑협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홈쇼핑의 모바일 매출을 방송 매출로 집계하지 않는 것인지</li> <li>○ 황금 채널의 혜택을 받는 홈쇼핑이 지주사나 재벌 오너에 대하여 배당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li> <li>○ 홈쇼핑 업계가 송출 수수료가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고 방송발전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li> <li>○ 홈쇼핑 업계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송출 수수료 인상분을 판매 수수료에 부당하게 전가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승인했으므로, 송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발언은 부적절</li> </ul>
	명 샤오원 한국화웨이 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영국 화웨이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의 보고서에서 화웨이의 기술 공정에 결함이 있고 산업 우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가 어떠한고 개선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지</li> <li>○ 시큐어 코딩 등 기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영국 화웨이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의 지적에 동의하는지</li> <li>○ 2019년 영국 화웨이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의 보고서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력·보안 기능에서 발견된 심각한 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li> <li>○ 화웨이가 2019년 영국 화웨이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의</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p>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현재 제시할 수 있거나 추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적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의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 예정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li> <li>○ 화웨이에 대한 영국 화웨이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의 보고서와 스페인 기관의 공통평가기준(CC) 인증 결과가 보안 기술적 관점에서 상반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li> <li>○ 화웨이가 스페인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5G 보안 인증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지</li> <li>○ 화웨이가 영국 의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에 개선 사항이 있고 향후 5년 간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투자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li> <li>○ 프랑스가 5G 무선통신망 설비의 운영에 관한 사전 허가제도를 포함하는 법률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li> <li>○ 화웨이가 프랑스 정부에게 5G 통신 장비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5G 통신 장비 허가와 관련한 어떠한 기준을 제시받은 바 있는지</li> <li>○ 5G 네트워크의 클라우드 환경은 4G 네트워크에 비하여 가로채기(interception) 위험이 높으므로 강화된 제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화웨이의 시큐어 코딩 같은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준이 5G 통신 보안 유지에 적합한지</li> <li>○ 화웨이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비를 제공하였으며, 당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li> <li>○ 정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화웨이가 전향적으로 응할 계획인지</li> <li>○ 화웨이가 한국의 과기정통부의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로부터</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p>참석·협조 등 공식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의 한국에서 5G 28GHz 장비 보급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li> <li>○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화웨이 장비 안에 백도어가 없다고 한 발언이 아직까지 변함 없는지</li> <li>○ 화웨이가 영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스파이 활동 금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스파이 활동이 발견될 경우에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li> <li>○ 화웨이가 한국 정부와 스파이 활동 금지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li> <li>○ 화웨이가 북한 통신 구축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지</li> <li>○ 한국화웨이가 5G 장비, 사물인터넷(IoT) 장비 등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이 백도어로 인하여 정보 유출 같은 피해를 받게 되면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지</li> <li>○ 한국화웨이가 한국 정부가 요청할 시 5G 보안 인증을 받을 예정인지</li> <li>○ 한국화웨이가 한국과 협력하여 양자 정보통신, 양자 암호 등 보안을 위한 기술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li> </ul>
	<p>문건 한국오라클 대표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오라클의 재무 정보가 불투명한데 지난 해 매출과 당기순 이익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li> <li>○ 한국오라클의 모회사가 법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데, 지난해 모회사로 송금한 기술 사용료가 얼마인지</li> <li>○ 한국오라클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국내에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불분명한 것인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10. 21.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한빛 3·4호기의 부실 시공의 원인이 아닌지</li> <li>○ 현대건설은 한빛 3·4호기에 157cm의 구멍이 나고 200개 이상의 공극이 생긴 것이 부실 공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지</li> <li>○ 현대건설이 한빛 3·4호기의 공극 문제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맡을 계획인지</li> <li>○ 한빛 3·4호기의 공극 문제에 대하여 현대건설이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예정인지</li> </ul>

#### 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요지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10. 4.	박태훈 주식회사 왓차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접속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와의 모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li> <li>○ 고화질 영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망 사용료가 비싸서 못하는 것인지</li> </ul>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 대신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li> </ul>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 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 이용자한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지</li> </ul>
10. 10.	김여정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학기술원이 「기간제법」을 우회하여 노동자들을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인지</li> </ul>
10. 17.	정상문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조합원에 비해 징계 문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li> </ul>
10. 21.	이강택 tbs 교통방송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bs 교통방송 재단법인화 계획에 따르면 이사장·대표이사 선발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시장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 존재</li> <li>○ tbs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li> <li>○ 이강택 tbs 교통방송 대표가 한국방송공사 PD 시절에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li> <li>○ tbs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할 때 대표가 직접 개입하는 일이 있는지</li> </ul>

일 자	대 상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손혜원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하여 편파적인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상파 라디오의 공정성 책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li> <li>○ tbs 교통방송이 출연진 구성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li> <li>○ tbs 교통방송 재단법인화 계획의 이사장·대표이사 선발 과정에서 시민 평가단의 비중을 서울특별시의 영향이 미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비중보다 높게 설정할 계획이 있는지</li> <li>○ tbs 교통방송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방송사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시사비비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li> <li>○ 2019년 1~9월 동안 tbs 교통방송에 야당 정치인이 199회 출연하는 동안 여당 정치인이 96회밖에 출연하지 못했는데, 여야간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li> <li>○ 다른 방법으로 교통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tbs 교통방송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li> </ul>

